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야말로 힐링 그 자체,
이 조직에서 일하는게 뿌듯해진 시간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대 상 | 최근 3년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직원
문 의 | 소속기관 심리치료팀(과) 담당자 또는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담당자
상 세 | QR코드를 찍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02-2110-3901



2박3일 프로그램



신규교도관
스트레스 대처

홍천, 안면도, 하동
신안, 해운대



장기근속자
자긍심 회복

설악, 통영, 신안



직무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평창, 충주, 남원
경주, 신안



숲속치유
심신안정

영주



가족
응원과 지지

평창, 예산
남원, 하동



비대면 소진예방
프로그램

자택



교정

vol.588.
2025. May

05

H e a l i n g

Contents

vol.588_2025. May



아름다운 동행

04 함께하는 길

산책 생각의 발디딤, 마음의 행로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前 교정본부장)

08 생각의 창

마약사범, 배우가 되다
장우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임교수

12 우리는 한마음

48년간 면면히 이어 온
아름다운 봉사 정신
인터뷰 | 한윤갑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진주시회 회원

교정 이야기

16 교정 이모저모

수용자 안전 및 시설 보호의 최전선에서
경북지역 교도관들, 불길 속 사투를 벌이다

20 교정 기관

오해의 시간 딛고 이해의 길로:
지역 풍경의 마지막 퍼즐 조각
강원북부교도소

26 교정과 사람들

노동 아닌 기술, 복귀 아닌 정착
교정시설 직업훈련 변화에 앞장
강원북부교도소 직업훈련과

교정 아카이브

30 교정 포커스

우리나라 현대 행형의 성립(하)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前 안동교도소장)

40 교정 논문①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상)
정상규 前 부산교도소 교위

56 교정 논문②

수용자의 권리행사와 제한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정혜림 서울구치소 총무과

70 교정 리포트

대마초 사용자들의 강성 마약류 사용과
중독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하)
유숙경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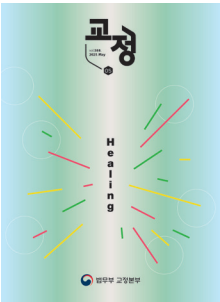
교정 뉴스

92 교정본부 NEWS

94 교정기관 NEWS

101 모범 공무원

102 독자마당



COVER STORY

가정의 달 5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에 더 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많은 이들과 우리 교정인에게도 예기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 서로 연결되어 한마음이라는 그 믿을 자체가 위로였고 힘이었습니다. 'Healing'이란 몸과 마음의 회복을 넘어서,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경북지역 교정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5년 5월 7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인스타그램 [instagram/korea_correctional_service/](https://www.instagram.com/korea_correctional_service/)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책 생각의 발디딤, 마음의 행로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
(前 교정본부장)

매일 오전 10시경이면 집을 나섭니다. 또 하루의 안온함을 위밍업 하는, 이른바 산책의 시간인 것입니다. 늙으면서 곱광내 나지 않은 영혼이란 없으며, 있다 해도 매우 드물다고 ‘미셸 몽테뉴’가 이미 말한 바 있었으니, 그 불쾌한 단언을 깨부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바쁘고 조밀한 삶의 루틴을 만들고 볼 일이었습니다. 마음에 뜻을 품으면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다 했으니, 퇴직 후 눈비 오는 날에도 빠짐없이 행하고 있는 이 산책 또한 그 마음이 가리키는 도전의 일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 몸이 건강했을 때는 만보 이상을 걸었지만, 작금의 처지에서는 잔걸음으로도 겨우 육칠천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누군가처럼 ‘저속 노화(Slow Aging)’ 따위를 쫓는 애처로운 행각은 추호도 아니고 다만 영육을 샤워하고자 함이니, 늘상 담담하고 능률한 마음으로 산책에 임하곤 합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의 이 시간이면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언제나처럼 산책은 기껍기만 하고, 더러는 변검 마술인 양 전혀 다른 나날의 표정과 냄새로 다가들어 유별난 생멸(生滅)의 실루엣들을 마음에 그려주기도 하지요. 유난히 춥고 긴 터널처럼 느껴졌던 울겨울을 이겨 나와 바람에 낭창낭창 흔들리는 꽃들이 오늘따라 더욱 아름답습니다. 아울러 파릇한 잎새들은 마냥 싱그럽기만 합니다. 그리하니 산책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요.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은 오늘 하지 않기’를 깨우치는 지혜를 불러 주고, 어제 쓰다 막혀 답답했던 사유의 노트, 그 문장의 빈 곳을 메워 줄 단어를 문득 날라주기도 합니다. 스스로 채집되어 오는, 마음이 읽어주는 언어들이랍니다.



안양천 독방길을 따라 500m쯤 걷자니, 오늘도 여지없이 독방 밑 바윗돌에 걸쳐 앉아 있는 ‘비둘기 노인’이 눈에 띄입니다. 이른 오전이건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의 등 뒤에는 이미 깨끗하게 비운 소주병이 감추어져 있고, 안주 삼아 먹고 남은 빵을 잘게 쪼개어 춤사위하듯 허공에 뿌리면서 그는 비둘기들과 놀고 있습니다. 길게 빨고 내뿜는 노인네의 담배 연기와 뒤엉킨 수십 마리 비둘기의 연무는 그저 슬픔의 냄새만 안쓰럽게 묻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몸과 영혼의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버린 허무의 잔해, 한 사람 인생의 회한을 보는 듯해 마음이 애잔해 옵니다.

썩쓸함을 뒤로하고 다시 걷습니다. 다리를 건너 공원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자니 문득 올봄에는 내내 보이지 않고 있는 ‘사랑 행렬’에 마음에 쓰입니다. 지난해

봄부터 늦가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각쯤이면 늘상 마주쳐 마음을 데우게 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팔십 줄로 보이는, 발걸음 겨우 떼는 노인네 부부와 중년의 아들·며느리 일행이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만든 끈을 이용, 아버지는 아들의 줄을 잡고 걷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줄을 잡고 걷는 그 광경은, 흔한 일상의 장면이 아닌지라 참으로 각별하게 다가들었으며 쉽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행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고 걷자면 다다른 목적지가 또한 같았으니, 관심의 눈길도 자연스레 배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원 운동장 가장자리에 있는 지붕 달린 평상에 다다르노라면 그 중년의 아들·며느리는 미리 준비해 온 베개를 이용, 두 노인네를 눕혀 편히 쉬게 하고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몸을 푸는 등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수행하듯 반복되는 그 효행을 지켜보노라면 정녕 사랑이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어쩌면 오가며 마주 잡았던 그들의 하얀 끈에는, 드러나지 않게 쟁여 놓은 그들만의 삶의 추억과 ‘행복 염색체’들이 가득 스며들어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갈수록 더 잘게 쪼개지는 가족으로 사는 오늘의 세대와 대비되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다만 이렇듯 봄이 무르익었음에도, 올해는 그 가족의 ‘사랑 행렬’이 보이지 않으니 괜시리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공원에 다다르니 오늘 역시 사람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운동 기구들이 있는 쪽으로 가서 옷옷을 벗고는 옛 시절의 ‘재건체조’로 몸을 풀고는 푸시업을 시작합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바닥에 낮게 설치된 푸시업 바를 잡고 늘상 하던대로 50회를 가볍게 하고서는 일어서는데 “할아버지 최고!”하고 웬 젊은 아낙이 큰 소리로 외치며 박수까지 칩니다. ‘늙은이도 마음속엔 아이가 산다’고, 그 박수와



칭찬이 싫지 아니합니다. 푸쉬업은 30대에 시작하여 나이에 맞추어 한 해에 1회씩 꾸준히 횟수를 늘려왔습니다. 이후 나이 50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딱 50회로 내 인생의 푸쉬업을 작정하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인 스스로의 의지와 수고에 의해 찾아진, 이제는 몸에 배고 익숙해진 운동이자 즐거움입니다.

푸시업 외에도 또 다른 기구들을 이용 이십여 분 더 운동을 하고서는 이윽고 귀가길에 오릅니다. 세월이란 게 마냥 가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이렇듯 꽃 피고 꽃향기 그윽한 새봄을 만끽하게 해주니, 내딛는 마음의 길이 이리 따뜻하고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암만 스산해도, 보푸라기처럼 쉽사리 잡을 수 없는 것들로 갈등하고 어지러워도 정녕 이 봄의 걸음마는 흐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햇빛 내리쬘고 산들바람 살랑살랑 부니 휘파람이 절로 나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다 내려놓고 유쾌하게 걷고 있는데, ‘오빠!’하고 누군가가 내 등을 두드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한 달에 한 번쯤은 산책길에 마주치는 ‘소피아 자매’입니다. 그녀 또한 이미 60대 중반에 이르렀거늘, 한번 오빠는 영원한 오빠라고 선언이라도 하는 듯, 30여 년 전 성당에서 만나곤 할 때의 그 표정 그 목소리는 도통 변함이 없습니다. ‘오빠 멋있어! 요즘 건강은 어때?’ 내 머리 위의 카우보이형 밀짚모자를 보며 던지는 그녀의 짓궂은 언행에 함께한 그녀의 친구 두 명도 덩달아 웃으니 괜시리 민망해져 나 또한 파안대소로 응답할 따름입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서로 묻고는 악수하고 돌아섭니다. 따뜻한 노래 한 곡을 부르고 난 뒤처럼, 마음의 바닥이 고즈넉해지고 또한 훈훈해지는 것도 같아 좋습니다. 어쩌면 오빠라는 어휘 때문에 더욱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동생이 없었던 터라 살아오며 오빠라는 말로 불러질 기회가 도통 없었고, 요즘과는 달리 옛날에는 사귀는 남녀 간이나 혹은 부부간에도 오빠라는 말은 금기어나 다름 없었고 보니, 지금의 기분이 그리하여 ‘업’된 것이라면 주책이라는 편잔을 들어도 유구무언일 따름입니다.

아카시아꽃 흐트러진 봄의 꼬트머리, 만개한 이 봄날을 깊은숨으로 들이마셔 봅니다.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고 했던 피천득의 글처럼,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화장하지 않은 맨얼굴의 이웃들이 정겨울 따름입니다. 생각의 발디딤이 그지없으니, 교정이라는 등짐을 지고 걸던 추억 속 옛길이 문득 눈에 아른거리고, 어릴 적 강변 백사장에 자리했던 곡마단의 나팔소리가 그리워지기도 하는 그런 봄날입니다.

마약사범, — 배우가 되다



장우현
한국의국어대학교 특임교수

문지방을 넘어가다

“이번에는 배우들이 트라우마 상황을 연기한 후에 진행하는 감정정화를 위한 실습인 <문지방 넘기>입니다. 여러분 2미터 앞 정도에, 이곳 현실에서 상상의 공간으로 넘어가는 문을 만듭니다. 제가 신호를 드리면 문지방을 넘어 치유의 공간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근육의 긴장을 제거하고요. (다들 천천히 숨을 내뿔으며 이완하고 집중한다) 다들 준비되었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Go!”

올해 2월부터 이곳 교도소 교육실에서 진행된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연극치료 프로그램의 참여자 13명의 수용자들은 저마다의 시공간에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편안한 표정과 호흡, 그리고 부드러운 몸의 움직임을 통해 선명하게 전달되고 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무엇인가를 메모하였다. 치유의 공간에 대한 다른 참여자들의 보고를 다 들은 후, 마지막으로 그에게 실습과정을 물어보았다.

“(한숨을 쉰다) 감사님...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상상의 문지방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마약이 가로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마약은 어떻게 생겼나요?”
“거대하고 투명한 ‘막’이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막에 부딪혀 다시 메아리로 돌아오고, 저는 단 한 걸음도 치유의 공간으로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총 21회기 일정 중 8회기에 진행된 <전할 수 없는 말> 실습에서 그는 자신의 마약중독과 강하게 결합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감정응어리와 사건을 처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연기 발표가 끝나고, 다른 참여자들의 공감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듣고 그는 다른 수용자들에게 고맙다는 한마디 말을 꺼냈다. 그리고 그와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은 침묵했다.
약 5분간.

감정을 만끽하다

연극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문서인 기원전 2-3세기 경 인도에서 쓰여진 <나티야 샤스트라>부터 20세기 초 러시아의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우리에게 메소드연기라고 알려진 연기법의 기초가 된 연기이론) 관련 문서들까지 연극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이 있다.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삶은 물론 작가가 제시하는 삶에서 한 개인이 만나는 모든 감정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혹은 이들 사이에 위치하는 모든 종류의 감정들을 끝까지 경험하는 ‘감정만끽’ 연습을 해야 한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수천 번의 감정만끽 연습을 통해 배우는 비로소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즉, 자유롭게 감정을 느끼며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려 한다. 또한 배우들은 무대에서 혹은 카메라 앞에서 라사rasa라고 불리는 감정의 에센스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기쁠 때, 기뻐하며, 슬플 때, 슬퍼하며, 화날 때, 화내며, 미울 때, 미워하며, 사랑을 느낄 때, 온맘으로 사랑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은 물론 작가가 제시하는 삶에서 한 개인이 만나는 모든 감정들, 긍정적인든 부정적인든 혹은 이들 사이에 위치하는 모든 종류의 감정들을 끝까지 경험하는 ‘감정만끽’ 연습을 해야 한다.



경험을 경험하다

물질사용장애의 회복을 위한 이론적 모델인 Lifestyle Balance Model(LBM)과 물질중독을 공통요인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관점인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s Phenotyping Assessment Battery(NIDA PhAB)에서는 메타인지, 실행기능, 내수용 감각, 정서조절 등을 중독치료의 주요한 요인들로 제시한다. 즉, 정서를 인지적으로 경험하고 또 조절하여, 문제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경험이 다시 중독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독회복의 목표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이번 연극치료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순차적인 실습들과 더불어 메타인지, 성인실행기능, 생리적 스트레스, 정서조절곤란 척도 등을 활용하는 실험연구를 병행하여 실제적 효과성 또한 확인하고자 한다.

이번 연극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3명의 수용자들은 약 3개월 동안 강렬한 감정 반응이 유도되는 자신만의 에튜드(etude, 즉흥상황극)를 설계하여,

수행하는 배우이자 동시에 관찰하는 관객이 되는 경험, 즉, 자신의 경험을 아주 천천히 안전하게 경험한다. 더 나아가 혼자가 아닌 집단작업을 통해 자신의 경험들이 더욱 확장되고 연결되는 경험을 한다면, 출소 후 만나게 될 부정적인 감정경험과 갈망의 상황에 의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비축하게 될 것이다.

서로가 연결되다

총 21회기 일정 중 14회기에서는 수용자들이 가진 행복한 경험을 다시 경험하고 기억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발생가능한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하기 위한 긍정적 자원을 비축하는 것이 목적인 작업이다.

한 수용자는 20여 년 전 가족들과 소풍을 가는 순간을 떠올렸고, ‘놀이동산’이라는 제목의 에튜드에서 자신의 97년식 아반떼 차를 타고 아내 그리고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을 가고 있었다. 연기하는 수용자는 물론, 에튜드를 지켜보는 관객인 12명의 수용자들까지 그날의 길과 날씨, 스틱 기어의 느낌이 생생하게 오감으로 느껴졌고, 아이가 최근에 배운 노래를 부르고 아빠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할 때,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 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쭈욱~
앞다리가 쭈욱~ 팔딱 팔딱 개구리 됐네~ 꼬물 꼬물 꼬물 꼬물~ 꼬물
꼬물 올챙이가~ 뒷다리가 쭈욱~ 앞다리가 쭈욱~ 팔딱 팔딱 개구리
됐네~”

하나둘씩 노래를 따라 부르다 급기야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다. 마치 그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으며, 대다수는 웃고 있었고, 몇몇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무심히 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사실 저는 자식들과 저렇게 행복하게 함께하는 순간을 경험 못했습니다. 늘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동안 자식들이 훌쩍 커버렸습니다... 그래도 에튜드 발표를 보면서 뭔가 가슴이 뭉클하네요.”

마약중독자가 느끼는 가장 특징적인 경험은 ‘단절감과 고립감’이다. 마약에 중독되면서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세상, 더 나아가 ‘나’와도 단절되고 고립된다. 자신과 사람들,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중독회복의 핵심이다. 연극이라는 예술 안에서 서로 다른 삶과 경험이 연결되고 이해되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48년간 면면히 이어 온 아름다운 봉사 정신

한윤갑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진주시회 회원

INTERVIEW

30년 넘게 수용자를 교정교화하며 봉사했으니, 퇴직하면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라는 주변의 권유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봉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한 그는 현역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량을 선보이며 지역사회와 교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진주시회(이하 진주시회) 한윤갑 회원의 '48년 봉사 여정'이다.

글_강진우 사진_손호남

친구 따라 들어선 교정교화의 길

학창 시절 한윤갑 회원이 다니던 학교 근처에는 수용자들이 작업에 임하던 농장이 있었다. 때때로 등하굣길에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정의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면서도 일종의 측은지심 또한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다.

시간이 흘러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전방 부대에서 군 생활을 모범적으로 마치고 단기하사로 전역한 한 회원은 고향으로 돌아와 미래를 구상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교정공무원으로 입직한 고향 친구들이 '너와 잘 맞는 일인 것 같다'며 함께하기를 권했다. 불현듯 어릴 적 목격했던 수용자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이들을 교정교화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먹었으니 망설임 이유가 없었다. 곧바로 임용시험 준비에 들어간 그는 1978년 10월 5일, 신입 교정공무원으로서 진주교도소에 들어섰다. 진주교도소와의 33년 인연이 첫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고향에 있는 교도소인 데다가 입직 직후부터 정년퇴직 때까지 이곳에서만 근무했기에, 진주교도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직 시절부터 진주교도소의 발전에 힘을 보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 왔는데요.

1992년에는 나무 농장을 하는 친구에게 황금측백나무 100여 그루를 협찬받은 뒤 차로 직접 신고 와서 여사 정원, 민원실 앞, 청사 주변 등에 심음으로써 한결 쾌적한 교도소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교정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한 주요 이유인 수용자 교정교화에도 정성을 다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용자가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에 임하며 죄를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는 하루빨리 새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동료와 돈을 모아 벌금을 대신 납부해 준 일,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진심을 다해 수용자들을 품으며 교정교화한 결과 여러 출소자가 감사 편지를 보내온 일 등 한 회원의 지난 교정공무원 생활에는 의미 깊은 교정교화 추억이 켜켜이 쌓여 있다.

진주시회에 불어넣은 사랑과 활력

한 회원은 교정공무원으로서 일한 모든 순간이 값졌다면서도, 교화과(현 사회복귀과)에서 근무했던 8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했다.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수용자 교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정위원 담당으로서 이들이 수용자들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지원하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이가 이때의 경험은 정년퇴직한 그를 다채로운

봉사활동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0년 6월 30일 퇴임과 함께 진주시회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곧바로 사무국장 보조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주시회가 활성화되어 진주교도소와 교정 발전에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산이었죠. 이듬해 3월에는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어 6년 간 일했고, 2019년 3월 회장으로 추대되어 올 3월까지 또 한 번의 6년을 거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처럼 10년 넘게 지회 활동에 매진한 회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웃음)”

진주시회장 취임 후 한 회원은 많은 활동을 펼쳤다. 직장 생활 내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준 진주교도소를 위해 ‘옛 직장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일환으로 식목일마다 진주교도소 일원에 나무를 심고, 교도소 내외부 나무 전지 작업을 하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도 주는 식목일 행사를 해마다 진행했다. 추석 즈음에는 진주교도소 진입로 주변 풀베기와 정화 활동에 나섰으며, 연말에는 진주교도소 각 과당 1명씩 우수 교정공무원을 선정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소정의 격려 상품도 전달했다. 새해마다 80세 이상 회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렸는가 하면, 매년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국립산청호국원 참배에 나섰다. 2023년 10월에는 전국 지회 중 최초로 6·25 전쟁 순직 교정공무원 충혼탑을 단체로 찾아가 분향 및 참배하기도 했다. 진주교도소와 교정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열정과 실천

한평생 진주에서 살아온 만큼, 한 회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적극 나섰다. 2011년 1월 재향군인회 진주시회 관문동회장으로 선출되어

지역 방위와 다양한 봉사활동에 힘쓰다가 취임 14년 만인 2025년 1월에 이임식을 가졌다. 2011년 3월 경남도민신문 지역기자단에 합류해 그가 거주하는 관문동 일대의 미담 사례, 주요 행사 등을 대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2013년 진주문화원 관문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봉사,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 문화재 발굴 및 관리, 환경정화 활동 등에 앞장서고 있다.

“교정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수용자 교정교화에 매진했는데, 또 무슨 봉사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물론 교정공무원의 업무는 봉사 정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나라로부터 봉급을 받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봉사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오로지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활동이야말로 진짜 봉사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보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퇴임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하우스 산팔기 농장 일로 바쁜 가운데에도 틈틈이 여러 봉사활동에 나서는 이유죠.”

교정공무원 생활 33년에 퇴직 후 봉사 생활 15년을 더해 총 48년간 이타적인 삶을 살아온 한 회원은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지역사회와 진주교도소, 교정의 상생 발전을 위해 봉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내조해 준 아내를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로 고맙다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려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어느덧 74세에 접어들었지만, 강건한 눈빛과 함께하는 삶을 향한 열정만큼은 청춘 부럽지 않은 한윤갑 회원. 그가 만들어갈 ‘더 좋은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벌써부터 기대가 샘솟는다.



교정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수용자 교정교화에 매진했는데, 또 무슨 봉사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물론 교정공무원의 업무는 봉사 정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나라로부터 봉급을 받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봉사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오로지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활동이야말로 진짜 봉사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보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퇴임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하우스 산팔기 농장 일로 바쁜 가운데에도 틈틈이 여러 봉사활동에 나서는 이유죠.

수용자 안전 및 시설 보호의 최전선에서 경북지역 교도관들, 불길 속 사투를 벌이다 교정공무원 존재 증명... 소방장비 보완 숙제도

해마다 봄철이면 산불에 대한 경각성의 카피가 귀를 사로잡는다. 그럼에도 크고 작은 산불은 매년 발생했고, 우리는 그것을 수많은 뉴스 중 하나로 접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우리에게 뉴스 아닌 '눈앞의' 실재(實在)였다. 불가항력이었지만 뭐라도 해야 했고, 해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용자 안전' 등의 절대 과제를 안고 사투를 벌인 해당 지역 교정기관의 교도관들도 있었다.

글_서선미 사진_교정본부



산불 확산과 교정시설 위기 '경고'

이번 경북 의성 발 산불은 일주일만인 지난 3월 28일, 완전히 진화됐다. 산림청은 이날 의성군 의성읍에 차려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5시 기준으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지역의 모든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4만 5,157ha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74.6%에 달하는 규모다.

3월 22일 경북 의성군 단밀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안동·청송·영양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됐다. 이에 산림청은 당일 오후 4시쯤 대응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항공기 50여 대와 진화 차량 10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진화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과 세기, 지면의 건조함 등으로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소방 당국은 공중 지원을 비롯한 전방위 자원 투입을 요청했으며, 이에 군부대와 경찰이 투입돼 도로를 차단하고 주민의 대피를 도왔다.

경북 북부지역 교정시설의 교도관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교도소 인근까지 불길이 빠르게 접근해

오자 이들은 '수용자 안전'과 '시설 보호'라는 이중의 책임을 짊어지고 긴박하게 움직였다. 뜨거운 연기와 재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평소 숙지한 매뉴얼에 따라 수용자들을 신속히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가 하면, 주요 시설이 화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확보하고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기도 했다.

'수용자 안전'·'시설 보호' 위한 대응

교정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수용자의 안전'과 '교정 질서의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복합적 공간이다. 그런 만큼 그 역할이 마비되거나 붕괴되면 지역사회의 안전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묘객의 실화(失火)로 번진 이번 산불은 삼시간에 안동교도소, 경북북부제1~3교도소, 경북직업훈련 교도소까지 덮치며 교정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태롭게 했다. 이에 교정본부는 각 시설 수용자의 이송을 결정하고 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나갔다. 대응은 단순한 이송에 그치지 않았다. 해당 지역 교도소의 교도관들 또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즉각 조직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산불 확산으로 위협이 현실화되자, 경북 북부지역의 각 교정기관은 수용자 보호 및 시설 안전 확보에 뛰어들었다. 수용동과 외곽 감시시설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했으며, 불길의 확산 방향에 따라 대피 동선을 조정하고 필수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정밀하게 대응해 갔다.

기관별 긴급 대응: 교정공무원 존재 증명

산불 발화 지점과 가장 가까웠던 안동교도소가 가장 먼저 비상 대응에 착수했다. 교정간부를 중심으로 수용자의 신속한 보호 조치와 방염 장비 확보가 이뤄졌으며, 교도관들은 외곽의 불길을 완전히 통제되기 전까지 순찰을 다니며 밤샘 경계를 강화했다.

가장 긴박한 상황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벌어졌다. 거센 강풍을 타고 번진 화염은 저녁 무렵 교도소 인근 산지까지 덮쳤고, 급기야 4.5m 높이의

시멘트 담장에까지 불이 옮겨붙기도 했다. 열기와 연기가 출입제한 구역의 철조망 안쪽까지 번지며 보안구역 전체가 위협받는 다급한 상황이었기에, 현장에 있던 교도관들은 소화전과 휴대용 소화기만 꼭 쥔 채 맨몸으로 진화에 나서야 했다.

한편, 사방에서 몰아치는 강풍을 타고 훑날리는 불씨는 나무와 잔디에 옮겨붙으며 제3교도소의 유류창고로 접근했다. 창고에는 난방용 등유 6,000L가 보관돼 있었는데, 이곳은 교도소 외벽에서 불과 열 걸음, 여자 수용동에서는 도보로 3분 거리였다. 자칫 불이 유류에 옮겨붙을 경우, 수용시설 전체가 연쇄 폭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이에 근처에 있던 20여 명의 교도관들이 일제히 소화기와 소화전 호스를 손에 들었다. 닿는 곳마다 물과 분말을 뿌렸으며, 번지는 불씨는 발로 꺾다. 역풍을 맞으며 물과 분말로 범벅이 되어 가는 중 이들에게 의지가 된 것은 물에 적신 수건 한 장뿐이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오른쪽이 위험하니 조심해라”, “저쪽에 불이 번진다”, “교도소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만이 서로를 향한 다독임과 스스로에 대한 다짐처럼 되풀이됐다는 것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교도관들의 생생한 증언이다.

불길 앞에서 서로를 지킨 경북지역 교도관들의 헌신은, 재난 앞에서 교정공무원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줬다.

교정기관 자체 모의훈련 큰 도움

좀처럼 잡히지 않았던 이번 화재는 장장 일주일 동안 이어지며 경북 북부 산악지대 곳곳의 산림을 집어삼켰다.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드는, 이른바 비행(飛火) 현상으로 불길은 건잡을 수 없이 확산, 교정시설까지 위협하며 사회 전반에 불안을 안기기도 했다.

한편 교정본부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 교도관들의 치열한 사투는 단순한 위기 대응 이상의,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줬다. 이번 대응은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와 수용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 교정공무원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교정기관은 평소 화재 발생 시 수용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대피, 초기 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숙달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불처럼 예측이 어려운 외부 재난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둬으로써, 긴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 그리고 이렇듯 철저히 준비된 대응체계는 이번 화재에서 유감없이 발휘, ‘수용자의 안전’과 ‘교정시설의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교정공무원은 단지 교정시설의 질서만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파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해 냈다.



소방장비 보완 등 숙제 남겨

이번 대규모 산불 진화 과정에서 돋보인 교정기관의 대응력과 교정공무원들의 헌신은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 보호’, ‘국가 재난 대응’에 큰 기여를 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방진 마스크와 젖은 수건, 고글 등을 착용한 채 근무복 차림으로 불길 앞에 섰던 교도관들의 모습은 교정시설 내 소방장비 부족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교정시설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높은 보안 수준과 복잡한 구조를 지닌 공간이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소방장비와 충분한 인력이 필수적임을 뜻한다. 결국, 이번 화재를 둘러싼 일련의 경험은 교정시설 내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장비 보완이 시급하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를 남겼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소방장비 점검 및 최신 장비 도입 ▲지역 소방서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인력 보강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정본부는 이번 재난 대응 사례를 면밀히 분석,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오해의 시간 딛고 이해의 길로: 지역 풍경의 마지막 퍼즐 조각

강원북부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는 외설악의 울산바위와 동해의 초록빛 바다가 일품인 속초시 장사동에 자리하고 있다. 건설 계획부터 완공까지 약 12년 동안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개청되며 예쁜 집들이 웅기종기했던 장사마을의 풍경을 '광활하게' 바꾸었다. 막힌 데 없이 사방이 트였음에도 행하거나 삭막한 느낌은 없다. 오히려 편안한 느낌의 풍경화에서처럼, 강원북부교도소는 이곳 자연 속에 스며들며 지역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사법 접근성과 자립 지원, 두 가지 숙제를 풀다

강원북부교도소는 대한민국의 54번째 교정시설이다. 그간 교정시설이 없었던 속초·양양·고성 등 강원 북부지역은 구속 피고인에 대한 사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2003년 신설 계획이 수립됐으며, 2007년 속초시 장사동 산33번지가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 이후 2014년 수용인원에 맞춘 규모의 설계를 완료했지만, ‘교도소’라는 시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착공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결국 2016년 7월 공사가 시작됐고, 2020년 4월 비로소 준공에 이르렀다.

보안청사 주 건물에 들어서면, 한쪽 벽면을 채운 대형 패널이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은은한 파도 무늬의 배경 위로 “참 고맙습니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교도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는 따뜻한 사람들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장치는 마치 머릿돌 같은 의미를 지닌 듯했다.

두 손에서 솟아오르는 태양, 민들레 씨앗, 나비들이 어우러진 일러스트까지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한다. 강원북부교도소의 방향성과 교정인의 정체성을 동시에 함축함으로써 방문객에게 은은한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강원북부교도소 직원들도 이 앞을 지날 때마다 교정인으로서의 긍지와 이곳에서의 초심을 다지게 되지는 않을까?

‘SINCE 2020’이라는 원년구(句) 역시, 비교적 짧은 역사 가운데 강원북부교도소가 뿌리를 내리고 정체성을 세우고자 기울여 온 노력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강원북부교도소는 이렇듯 낯선 시설이 아닌, 이 지역의 자연과 삶에 스며든 하나의 풍경이자 조용한 이웃이 되어가는 중이다.



교정의 일상에 깃든 쉼과 연결의 공간 ‘영랑회관’

강원북부교도소는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이라는 교정행정의 비전을 바탕으로, ‘인권이 존중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 기관’을 표방한다. 이에 강원북부교도소가 가장 먼저 신경을 쓴 부분은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이다. 신설 기관의 특성 중 하나는 타지역에서 전입되어 온 직원이 많다는 것이다. 강원북부교도소도 개청 초기가 그랬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교도소 인근에 머물러야 했지만 숙소가 마땅치 않았고,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휴식과 여가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어 아쉬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차에 2022년 11월,

드디어 직원 복지공간인 ‘영랑회관’이 조성됐다. 총 두 개 동의 비상대기숙소 건물과 이웃해 있는 영랑회관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갖춘 공용 ‘세탁실’, ‘탕비실’, 테이블과 당구대가 마련된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랑회관을 품은 강원북부교도소의 변화는 특별히 외지에서 온 직원들에게 반가운 일이었다. 고가의 세탁기나 건조기를 개인이 따로 마련하기에는 부담이 크기도 했지만, 세탁을 마치는 동안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친목을 다지는 즐거움도 생겼기 때문이다. 단순한 편의 공간을 넘어, 직원들 간 화목한 소통의 장소인 영랑회관은 이처럼 강원북부교도소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아가며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히 이곳만의 따뜻한 색깔을 더해가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 사람과 자연을 잇다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강원북부교도소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다소 이색적이다. 일례로 2022년



교도소 인근 유희부지에 조성된 ‘주말농장’은 직접 농작물을 재배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게다가 수확한 농산물을 동료 및 가족과 함께 나누는 자연 속의 경험이 직장 내 유대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기도 하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 정비 및 점검을 해결할 수 있다. 타지역에서 근무하느라 주말이면 장거리 운전을 피할 길 없는 직원들을 위해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속초시지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뒀던 터다. 그외, 속초의료원과의 협약을 통해 종합건강검진 할인, 입원 시 본인부담금 감면, 예방접종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강원북부교도소의 제1강령과도 같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10년 후’, ‘20년 후’, 그보다 먼 미래의 강원북부교도소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다.

복지에서 상생으로, 열린 교정행정의 길

직원은 곧 기관의 얼굴이다. 한 기관의 ‘알찬 복지’는 직원들의 생활 반경 속에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기 마련이다.

강원북부교도소 역시 밖으로는 교정시설의 문을 활짝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28일에는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속초시장과 영랑동·장천마을 주민 등 20여 명을 초청해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교정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던 당시 행사는 지역주민에게는 교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강원북부교도소에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진로체험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참가 학생들은 강원북부교도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거나, 직접 교정공무원의 업무를 체험하며 교정직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간다. 때로는 교도소 측이 직접 지역 중학교나 문화원을 방문해 교정직을 소개

하고, 보호장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모두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정직이라는 직업을 자연스럽게 알려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러한 취지 아래, 강원북부교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 걸으며 교정에 대한 열린 시선과 공감대를 넓히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수용자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

교정의 본질은 결국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강원북부교도소는 직원과 지역사회는 물론, 교정시설의 또 다른 주체인 수용자들에게도 그 가치가 확장되어 가도록 힘쓴다.

지난해 1월 2층 규모의 신축작업동을 마련한 강원북부교도소는 현재 수용자들에게 안정적인 근로 기회와 실질적인 직업훈련 제공에 주력한다. 작업장 부족으로 인해 미취업 수형자의 비율이 높았던 설립 초기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축한 작업동이 이제 수용자 직업훈련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미취업 수형자를 위한 인문학 교육도 운영 중이다. 단순히 거실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 목적이 아닌, 인문학적 교양을 쌓고 심성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수용 생활 중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배움의 보람은 물론 출소 후 취업의 기회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마디로, 수용자 개개인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 것, 또 그만큼 그들 곁을 지키는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 바로 이러한 철학이 담긴 실천이 강원북부교도소가 추구하는 교정의 방향이다.





노동 아닌 기술, 복귀 아닌 정착 교정시설 직업훈련 변화에 앞장

강원북부교도소 직업훈련과

강원북부교도소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단순 근로를 넘어 '기술 습득'과 '자립 기반 마련'을 함께 지향한다. 특히 지난해 1월 2층 높이의 작업동을 새롭게 마련, 기존 60%에 머물던 수용자 취업률을 최근 90%까지 끌어올리며 교정시설 직업훈련의 실질적 효과를 입증해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수용자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믿으며 실습장을 지키고, 자격증 취득까지의 과정을 함께한 직업훈련과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수용자와 사회, 다시 연결하기

'유기적 존재'라는 말은 하나의 '객체'이되,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안의 생명체를 뜻한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영위될 때 우리는 성장과 발전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이어갈 수 있으며, 그 상호작용 가운데 개인적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해 내야 비로소 '나' 역시 그 관계 안에 또 다른 힘을 보탬 수 있게 된다.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사회에서 새롭게 맞닥뜨린 환경에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과 기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술을 익히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머물기보다는, 해당 기술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을 쌓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도 있다.

강원북부교도소 직업훈련과의 업무는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수용자들이 사회로 돌아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은 물론, 그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직접 경험하면서 실제 직업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직업훈련과 직원들의 시간은 언제나 '미래'에 닿아 있다. 왜냐하면 교정기관 직업훈련의 최종 목표는 분명, 수용자로 하여금 출소 후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격증·진로탐색·멘토링 등 풀세트 교육

출소를 앞둔 수용자들의 실질적인 도움책인 강원북부교도소 직업훈련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취·창업과 관련해 '자격증 취득'을 돕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격증 취득의 경우, 수용자의 희망 분야와 적성에 맞는 직종에 따라 '지게차

자격증(정식 명칭: 지게차운전기능사)'와 '굴착기 자격증(정식 명칭: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과정이 진행된다. 과정은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체계적으로 실시되며, 자격시험 준비는 물론 실기 중심의 교육도 꼼꼼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출소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과 자신감을 모두 갖추게 된다. 그런가 하면 교육의 기회는 기술 습득, 자기 이해, 진로 탐색을 포함한 내용으로 제공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대비 요령은 물론,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 정보를 다루는 강의도 병행하고 있다. 특별히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수업은 수행자들이 실제 산업 현장의 분위기와 사회의 요구를 피부로 느끼게 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서

는 경동대학교·신용회복위원회·국민연금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와 강의 및 상담을 진행한다.

강원북부교도소의 직업훈련과는 이렇듯 직업에 대한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간헐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수용자와 함께 걸어간다. 교도소라는 경계 밖의 시간까지 보듬는 이들은 그 삶이 사회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인 것이다.

변화를 향한 유기적 협력의 여정

강원북부교도소 직업훈련과에서는 과장을 포함한 총 8명의 직원이 움직인다. 이들은 교도작업팀, 취·창업팀, 직업훈련팀으로 나뉘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교도작업팀은 수산물 가공(명태·멸치; 용도별 손질), 농산물 가공(클로버; 장식용 건조) 등 총 6개의 위탁작업장을 운영·관리하며 수용자들이 실질적인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 작업장은 지역사회 내 업체가 매일 가공할 물량을 교도소로 직접 반입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이를 다시 회수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실제 산업 현장의 흐름에 맞춰 일하며 근로 의식과 책임감을 동시에 체득하게 된다.

취·창업팀은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지원협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의 출소 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 수용자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업훈련팀은 현재 운영 중인 굴착기 및 지게차 직업훈련과정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부터 설명회 개최, 외부 강사 관리까지를 총괄한다. 자격증 취득은 물론,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 수용자들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강원북부교도소 직업훈련과의 각 팀이 맡은 역할은 다르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활동은 한 가지 공통된 목표로 귀결된다. 그것은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즉, 수용자 개개인이 자립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다시금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직업훈련과의 핵심적 존재 이유인 셈. 강원북부교도소 직업훈련과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도 묵묵히 이어지고 있다.

mini interview

목영훈 과장



직업훈련과의 존재 이유는 수용자들의 '이후의 삶'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단순히 기술 교육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죠.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그 변화가 수용자 스스로의 의지에서 비롯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실습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도 튼튼히 만들어 가야 하고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 알 수 없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저희 직업훈련과의 노력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 현대 행형의 성립(하)



김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前 안동교도소장)

목차

- I. 서
- II. 해방, 그리고 미군정의 억압적 통치와
행형운영의 한계(1945년 8월~1948년 8월)
- III.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정치화된 형무소
(1948년 8월~1950년 6월)
- IV. 6·25전쟁과 형무소 피난, 희생과 야만적인
학살(1950년 6월~1953년 7월)
- V. 전후 재건과 행형개혁을 위한 도전
(1953년 7월~1961년)
- VI. 결어 : 행형에서 교정으로

참고문헌

V. 전후 재건과 행형개혁을 위한 도전 (1953년 7월~1961년)

가. 서

국가는 1955년 형무소부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6·25전쟁 이후 형무시설 복구와 개선 및 행형시스템의 개선 사업에 나서 치열한 노력을 통해 1961년 행형에서 교정으로의 전환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행형개혁가들은 6·25전쟁 이후 주요 목표가 ‘민주행형’의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패한 정권을 위해 일하든 반대하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민주화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제도를 개혁하려는 진지한 시도이거나 자유화, 근대화, 미국화라는 보다 모호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모순적으로 보이거나 최소한 공허한 선전으로 보이지만, 행형의 민주화라는 목표는 형무소를 보다 효율적인 갇셈과 냉전적 주체 형성의 장으로 재건하고 변화시키려는 진지한 요구였다.

6·25전쟁으로 인해 19개 형무소 중 3개(마산, 부산, 대구)를 제외한 모든 형무소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형무소 인프라 피해 외에도 형무소 직원들도 전투 첫 해 동안 전선이 급격하게 바뀌는 비참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거나 근무지에서 사망했다. 공개적인 보복 행위가 진정되고 법무부와 형정국이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한 후, 피해를 평가하고 전쟁 전 초기 정권의 최소한의 개혁 진전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전쟁 전 형무소 시스템은 일반 범죄의 가해자를 유죄 판결하고 재판하고 처벌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여야 했으나, 형무소를 좌파 반대파를 감시하는 장소로 변모시키는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형무소와 한국 사회의 현대화라는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시스템을 전쟁 전의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재건해야 했다.

6·25전쟁 후 행형개혁가들은 식민지 시대의 과거에 대한 불안과 냉전 시대 미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주 행형’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형 시설과 문화 자체를 재구성했다. 재소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행형 민주화와 함께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기게 되었다. 민주화 담론은 인도적 처우의 개념을 확장하여 적절하게 설비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작업, 교육, 오락, 종교적·도덕적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했다. 이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 시 서울형무소를 2차례(1954년 12월 12일, 1960년 1월 1일) 방문하였으며, 이는 현대 행형사에서 행형개혁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룬 첫 번째이자 마지막 시도였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진화하는 민주행형 담론의 윤곽을 따라가면 먼저 우리나라 행형개혁자들의 미국과 유럽에서의 시찰여행을 통한 행형개혁과 이를 통한 시설과 행형운영의 현대화, 국제원조를 기반으로 한 전후 시설복구, 그리고 각종 법령의 정비 및 이를 통한 행형의 발전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원형무소 건설은 이 시기에 있어 행형개혁의 결과물로서 성과를 거두려고 치열하게 노력하였으나 이론과 실무, 인력, 경험 등 모든 분야에서 빈약한 인프라로 인해 그리고 이어서 발생한 5·16 군사혁명으로 인해 좌절에 직면해야 했다. 다만, 수원형무소 건축구조와 운영방식은 우리나라 행형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매우 중요한 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제정된 행형관련 법령을 살펴보는 것은 전쟁후 시설복구를 위한 노력 속에서도 재소자에 대한 의식주와 갇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행형의 개혁을 알기 위해 필요하다. 1950년 행형법 제정 후 약 6년 만에 1956년 2월 2일 「행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25호)이 시행되었다. 6년이라는 시간은 6·25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형무소 시설을 복구하고 행형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으나 행형법시행령의 내용은 1912년 시행된 감옥법시행령의 구조와 내용과는 거의 다르지 아니하였다. 1957년 7월 19일 「재소자 식량급여규정」(법무부령 제21호), 「재소자 의류 및 침구의 제식규정」(법무부령 제22호)이 시행되어 재소자에 대한 의식주의 기본적인 수준을 갖추게 되었다.

나. 복구와 재건

행형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쟁으로 파괴된 형무소 시설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형무소의 시설과 장비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도난당하는 등 전체 시설의 8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6·25 전쟁 당시부터 계속된 빨치산 혐의자와 전시 민간인 정치범을 구금하기 위해 구금 시설 확충이 시급하였다. 형무소는 항상 과밀했지만 전시 반역죄로 구금되는 정치범이 증가하고 전쟁으로 손상된 시설의 수용 능력이 감소하면서 더욱더 과밀해졌다. 행형개혁가들은 민주행형 이론과 물질적 실천을 통합하는 최신 시설을 건설하여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을 계획을 세웠다. 이는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형무소는 물론 행형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 원대한 목표였다. 1953년 7월 휴전 이전부터 유엔한국재건단(UNKRA), 유엔한국민간원조단(UNCACK), 국제협력단(ICA) 등의 원조 단체들은 한국의 공장, 병원, 기타 중요한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38도선 주변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유엔한국재건단과 ICA는 1951년 11월 남부 지방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7개 형무소에 5,445㎡(1,650평)의 감방 공간을 재건하는 데 자원을 투입했으며,

229,323달러 상당의 건축 자재를 제공하여 피해 형무소 전체에서 즉각적인 구금 요건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1954년 국제협력단(ICA) 원조자금 1차 연도 45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수원에 현대식 중간형무소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 일반인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망라하고, 형무소부흥대책위원회의 토의를 심수회 거듭하여 설계를 완성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6·25전쟁으로 인해 다른 분야보다 형무소 건물 및 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빈약한 국가재정으로 복구사업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기술상·경제상 등 제반 애로에 부딪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민주행형을 지향하면서 파괴된 형무소를 부흥하기 위해 조사하고 이에 따른 대책과 계획을 수립할 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형무소부흥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1955년 2월 17일 법무부 형정국장실에서 신언한 형정국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형무소부흥대책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재를 당한 형무소의 부흥대책에 관하여 제반조사 및 심의를 하며 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형무소부흥대책위원회규정 제1조).



수원형무소 자치제 기념비
(左_설립 당시,
右_현재 여주교도소에 있음)

전체 시설은 1954년에 45%, 1956년에 52%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1960년까지는 70.1%만 복구되었다. 복구 과정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전후 재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형무소와 행형을 냉전 블록 구축의 문제로 암묵적으로 재구성했다. 우리나라가 형무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ICA는 법학자, 경찰, 형법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전문들을 미국과 유럽으로 파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형무소 현대화에 대한 개혁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냉전시대 후원자이자 롤 모델인 미국 형무소를 직접 경험하면서 도출된 발전적 경로를 따라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이기도 했다.

1957년 8월 말 현재 복구실황(6·25 전쟁으로 인한 파괴)(형무요람, 1959년)

구분	6·25전 평수	파괴평수	복구평수	미복구평수	복구비율
서울	8,211.94	6,586.89	4,599.10	1,987.79	70
마포	4,181.30	417.23	376.61	40.62	90
대구	3,861.88				
광주	2,991.46	2,681.46	1,087.54	1,593.92	41
대전	4,063.61	3,011.91	2,101.81	910.10	70
부산	3,210.30				
전주	2,152.26	2,040.70	993.70	1,047	49
부천	5,928.77	5,744.55	1,534.67	4,239.88	27
인천	2,563.78	2,038.05	1,283.40	754.65	63
목포	1,708.20	1,258.90	494	764.90	40
김천	2,159.27	2,159.20	809.50	1,349.70	40
공주	2,176.30	2,176.30	834.50	1,341.80	40
수원	1,060.70	754	615	139	82
춘천	1,427.70	1,427.70	868.40	559.30	63
청주	1,491.72	1,475.72	613.50	862.22	42
군산	1,326.50	892	411	481	46
안동	1,394.89	1,274.89	575.89	699	45
진주	1,334.80	1,334.85	744.05	590.80	57
마산	1,000.72				
소록도	216.80				
형무관학교	900	869	750	119	87
합계	53,863	26,173	18,692	17,481	평균 52%

다. 개혁을 위한 치열한 노력과 한계

전쟁 후 1960년까지 수용인원은 급격한 증가 없이 약간의 증가추세에 있었다. 이 시기에 행형은 미국의 지원 하에 식민지 행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행형에서 교정으로,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형무관에서 교도관으로의 기초를 닦는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연도	계	기결	미결	기타(노역)	주요사건
1954	16,626	14,136	3,471	19	
1955	17,091	14,809	2,245	37	
1956	16,159	13,919	2,224	16	

1957	18,429	15,264	3,138	27	
1958	19,426	15,614	3,729	83	
1959	19,533	16,211	3,248	74	
1960	19,446	13,971	4,421	54	5·16혁명
1961	30,036	18,185	11,179	42	

법무부는 1954년 새해를 맞아 ‘인권 보호’와 ‘행형 민주화’를 슬로건으로 한 법무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몇 년간 영장 없는 체포, 성급한 처형, 고문 및 기타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가 쇄도했던 한국 경찰과 검찰의 암울한 인권 기록을 개선하는 것은 부끄럽고 당연한 개혁 목표였다. 그러나 처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개혁가들은 구금자 확대를 없애기 위해 형무관 문화의 변화도 요구했다.

개혁 담론에서 미국과 유럽의 행형에 대한 이상(理想)화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악마화와 병치되었다. 행형에 종사하는 형무관들은 전후 개혁조치를 봉건적 과거로부터의 역사적 각성이라는 정부의 노선을 따랐다. 봉건적 잔재와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형무소를 구현하는 것이 이 세대의 행형학자들의 역사적 소명이었다. 이러한 행형 발전의 틀은 식민지 시대의 유산과 해방 이후 구금자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를 넘어, 구금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우리나라가 냉전 동맹의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형무소는 1950년대 내내 유엔과 미국의 홍보 활동과 점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최세황은 1953년 초 영국을 방문하여 여러 형무소를 방문했다. 영국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는 단순하고, 한국의 형벌 개혁을 위한 비교 분석이나 처방은 약간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1950년대 중반 한국의 행형개혁가들은 오래된 형무소가 식민지 시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무소 건설을 통해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베테랑 형무관들은 대개 과거 식민지 체제 하에서 일해왔고, 점진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오명은 더욱 심해져만 갔다. 오랜 경력을 통해 얻은 그들이 가진 노하우는 식민지 관행의 잔재라는 비난을 받았다. 법무부 행정국장 신언한은 1954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했으며 수원형무소를 최소한의 보안을 갖춘 시설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월동은 부산형무소장으로 1955년 9월부터 1956년 1월까지 미국 연방 및 주 행형기관을 견학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형무소는 극적인 재건과 혁신을 겪고 있었고, 미국의 형무소는 갱생 기반 교정 모델의 효율성이 정점에 달하고 있었다. 개혁가들은 1955년에 발표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에 명시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받았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형무소 시스템은 우리나라 형무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로드맵이었다.

1955년 8월 FOA는 최세황이 워싱턴,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일리노이주 방문하는 4개월간의 해외여행에 1천5백 달러와 2천 달러의 봉급을 지원하기로 했다.¹⁾ 최세황의 공식 FOA 프로젝트 제목은 형무소 운영 및 관리였다. 미 국무부의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지원은 1950년대 전후 한국의 빈곤한 상황에서 살던 한국인들에게 매우 드문 경험을 제공했다. 그가 쓴 글에는 자동문, 방탄유리로 분리된 면회 시설, 전화 수신기, 구금자 거실 내 라디오 등 20세기 중반 기술 강국의 형무소에서 인상 깊었던 점들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이 충격적인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그는 뉴욕시 형무소의 베테랑 형무소장을 만난 이야기를 소개했다. 형무소에 들어서자마자 소장은 최세황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들이 유엔군과 함께 한국에 파병되어 전쟁 후에도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다른 여러 나라의 행형 관련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행형 관련 문서는 아직 입수하지 못했고, 한국의 행형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설명을 요청했다. 최세황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 행형법의 영문 번역본과 형무소 조직도를 출력해 보여줬다. 그는 인쇄물을 잠시 살펴보더니 ‘일본 제도와 거의 똑같다’며 무관심한 듯 안경을 벗고 말했다. 미국의 형무소 소장들은 1955년의 우리나라 행형제도가 식민지 시대의 뿌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무심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시사하고 있었다. 최세황은 자신의 노력이 과거 식민지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다는 말을 듣고 크게 낙담했다.

형무소 개혁 담론은 탈식민지화와 전쟁이라는 독특한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서구 모델에 대한 수용은 공산주의 팽창에 대한 보루로서 동북아시아의 국가 통제 장치를 안정화시키는 프로젝트에 국한되어 있었다. 민주행형은 형벌 이데올로기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실질적 영향은 형무소 공간을 미국의 냉전 블록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더 광범위한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것이었다. 전후 재건기의 일선 형무관부터 형무소장, 형법 학자, 법무부 고위급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민주의 행형 이념을 표현했지만 대체로 파괴된 시설복구, 최소 보안형무소 개발, 수용자 교육 및 오락 프로그램 개선, 형무소의 위생 및 의료시설 확보 등 몇 가지 핵심 개혁 과제로 귀결되었다. 보다 추상적으로 민주행형을 추진한 배경에는 냉전의 자유 세계 건설이라는 초국가적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형벌을 통합하여 탈식민지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민주행형은 이념적, 형법적 측면에서 형무관을 교육자로, 재소자를 제자로 삼아

형벌을 ‘교육적’인 것으로 재구성했다. 형정국장 신언한은 근대 행형의 임무를 교정 교화를 통해 각 범죄자의 개별적 인격을 치료하는 것으로 재구성했으며, 서구 계몽주의 이후 전개된 목적론적 형벌 역사를 들며 나태함, 게으름, 자제력 부족 같은 범죄자의 특성은 형무소에서의 올바른 교육과 대우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개인의 측면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적 형벌과 민주적 형벌은 종종 혼용되거나 다양한 개혁 이니셔티브의 기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용어와 우리나라의 냉전 동맹국과의 상관관계로 인해 민주행형은 형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변화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되었다. 민주행형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이 수용자의 적절한 분리를 위한 시설 재건, 가족 및 사회와의 접촉 확대를 위한 안전한 접견제도, 의료 시설 및 작업 프로그램 개선, 수용자 처우 개선 등이다. 범죄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국가와 범죄자 간의 상호작용이 종결되거나 범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유 사회에 다시 합류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행형의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정치적 동기를 부여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반대로 위생적인 구금 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물질적인 문제는 국제원조를 통해 제공되는 돈과 물품으로만 극복할 수 있었다.

VI. 결어 : 행형에서 교정으로

우리나라 행형은 1961년 행형법 개정을 통해 행형에서 교정으로의 길을 출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을 위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 희생을 통해 얻은 값진 결과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형무소의 공간이 담아낸 역사에 대한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교정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지만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다. 2010년 발간된 『대한민국 교정사』는 우리나라의 현대 행형제도가 이념 세뇌, 정치범 예방 구금과 학살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역사는 한국 행형사를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놓지 못하고 형무소 제도를 당연시하며 그 역사를 현재로부터 거꾸로 연장하고 있다. 현대 행형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범죄자라는 이유로 같은 국민을 잔혹하게 대하는 국가의 자세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와 공존하지 못하고 국민은 자신의 지역에서 교도소를 쫓아내는

1) ICA의 전신인 해외공작국(FOA)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1954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 원조 단체 연합은 약 1,700명의 한국인의 미국 기술 연수 여행을 지원했다.

행태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의 피해는 자신들과 가족 그리고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이다.

뿐만아니라 국가행정의 일부인 교정은 그 특징에 대해 배려받지 못하고 운용되면서 국가는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이 가까운 장래에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 범죄자를 우리와 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괴물)으로 대우하는 한 그리고 국가운영과 대중의 관념을 혼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정정책이 좌우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 범죄자를 재사회화하기 위한 교정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구금은 범죄로부터 사회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 담론을 벗겨내면 구금은 사람을 우리에 가두는 단순한 행위일 뿐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현대사를 통해 순수 범죄가 아니라 특정집단의 생각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했던 일들이 교도소에 대한 주된 기억으로 대중들의 머리속에 자리 잡았다. 그 영향은 범죄자란 누구인가와 범죄자 처우 그리고 재사회화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교정철학에 오랫동안 혼란을 초래하였다. 또한 교도소는 사회복귀, 형벌, 무해화라고 하는 모순된 목적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했고 그와 같은 목적에 대한 혼란의 결과는 교도소의 역사를 끊임없이 실패의 역사로 만들었다.

1961년 행형에서 교정으로 획기적인 전환 이후 교정현장에는 처벌과 교화의 균형 축이 무너져 죄에 대한 벌의 관념은 사라지고 교화만이 남아있다. 앞에서 살펴본 현대행형사의 불행한 사건들로부터 잉태된 교도소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은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보장을 위해 중복되고 다양한 관료적 통제를 만들어냄으로써 구금의 위하력과 일반예방의 효과 그리고 교도관의 역할과 감화력을 약화시켰다. 수용자에 대한 전통적인 관리방식은 2000년 이후부터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개입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평균적 정의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현실과 거리가 있다. 고립된 교정공무원들은 위축되고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불신하면서 자존감을 상실하고 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으며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교도관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현대행형사를 연구하고 정리함으로써 교훈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교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 역사는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그리고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금융명, 교정학, 박영사, 2021년 9월 25일
서운재, 일제강점기 조선행형이야기(증보판), 교도소연구소, 2023년 4월 1일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민국 교정사 I, 2010년 5월 31일, 교정본부
법무부 형정국, 형무요람, 1956년, 형정국
James David Hillmer, Democratizing Punishment: South Korean Penal Reform and Cold War Subjectivity 1945-60, Doctor of Philosophy in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22

남·북한 교정 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상)



정상규
前 부산교도소 교위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독일의 교정행정 통합 사례
- IV. 교정행정 통합방안
-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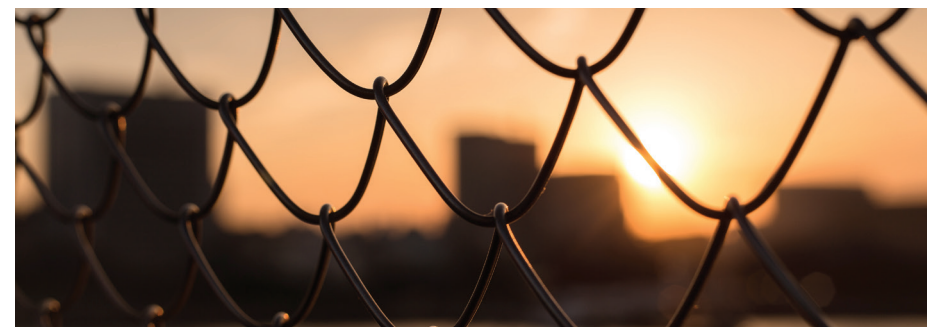
참고문헌

국문요약

남북 분단 78년 현시점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체제, 모든 부문의 통합이 중요하지만 남·북통일 후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법행정 그중에서도 교정행정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정 속에 시간이 흘러 가상하여 20년 후인 2044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도 준비 시간은 길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동·서독통일 후 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통일독일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 통일의 과제를 남·북한의 새로운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할 수가 없다. 독일통일과정과 남·북한은 확실하게 복잡한 부문에서 비슷한 부문도 존재하지만 다른 부문도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 통일 후 안게 될 책임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을 이룩한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북측지역의 교정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교정시설 복구 비용, 북한교도소시설 활용 방법, 북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표준, 수용자 재분류, 개별처우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개발, 교도소 신축 시 건축 형태, 재임용 탈락자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 교도소시설의 의료지원 방안, 군교도소와 민영교도소 분리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교도소정책의 문제는 그간 한국교정학회와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포럼 등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정치 상황이 지나치게 변동적이고 민감한 특별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동독과 서독 통일 사례등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 남·북한 간의 통합 교정행정, 정치범 수용소, 북한수용소 인권 침해, 독일 통일 사례, 재소자, 교정정책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범 예방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한반도는 일본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직후 연합군이었던 미군 및 소련군의 진주와 정치이념의 차이로 분단되었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미소 군정기에 서로 다른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던 미국과 소련의 영향으로 두 지역 간 정치, 이데올로기적 격차가 벌어져 종래에는 1948년 각자 별도의 국호와 통치체제를 수립하면서 남·북 분단이 확정되었다.

남북 분단 78년 현시점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체제, 모든 부문의 통합이 중요하지만 남·북통일 후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법행정 그중에서도 교정행정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향후 남·북 통일이 서서히 온다고 해도 한반도의 통일 준비 기간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독일통일 후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통일 독일의 보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교정행정의 통합은 통합국가의 헌법 이념, 형사 법제의 변화에 의해 북한지역의 수감인원의 규모가 정해지고 필요한 교도소인력과 설비가 단계적으로 확정될 것이다. 다음 단계는 통합국가의 이념에 따라 수용자의 교육과 교정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것이다.

남한의 교도소 행정은 교도소의 이념, 수용시설 및 복지, 수용자 인권 보장,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및 교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열악한 북측지역 교도소시설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교도소건물 개선과 직원 및 수용자 교육 등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된다. 북한지역 교도소시설은 북한 사회의 인권침해 상황의 중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교정당국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는 통합단계에서 예산 부족과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단계별로 도출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논문의’ 연구의 범위는 “북한수용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서 향후 남·북 통일 후 교정행정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남과 북의 5000년 역사에 따른, 같은 동족과 언어 관습 등 동일한 면과 남·북 분단의 79년 세월은 다른 법과 제도, 정치, 문화등 국가와 사회의 각자 특정한 방향으로 역사를 유지 하고 왔기에 다른 상황이 주어져 왔다.

이 논문의 범위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교정행정의 비교연구와 남·북한의 교정행정통합 후 발생 되는 문제점과 추후 발생하는 해결방법을 연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통합은 여러가지 의미를 뜻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합은 부분이 전체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적인 단위가 일관성 있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통합되기 이전에는 개별 단위들이 존재하며, 통합 상태인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체계적인 특징을 만들어 통합적 과정을 기술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을 문화적 혹은 사회적으로 나누어진 집단들이 하나의 영토적 단위를 결합시켜서 국민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 가는 단계이다. 여기서 통합은 문화집단, 사회집단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면서 하위 단위나 지역에 대한 국가의 중앙권위를 확립해 나아 가는 문제와 관련한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1. 남한의 교정행정 제도

1) 교정행정의 목표

교정행정의 목적은 교도소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를 교정교화 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정교화 교육이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도소 수용시설에서 수용자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것이다. 교육형주의에서 말하는 교정교화 교육의 의미는 범죄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전환시키는 제반 교정 방법이며, 사회 적응성이 결여된 재소자에게 반사회적인 성격을 교정교화하여 정상적인 생활인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신용해, 2019 p3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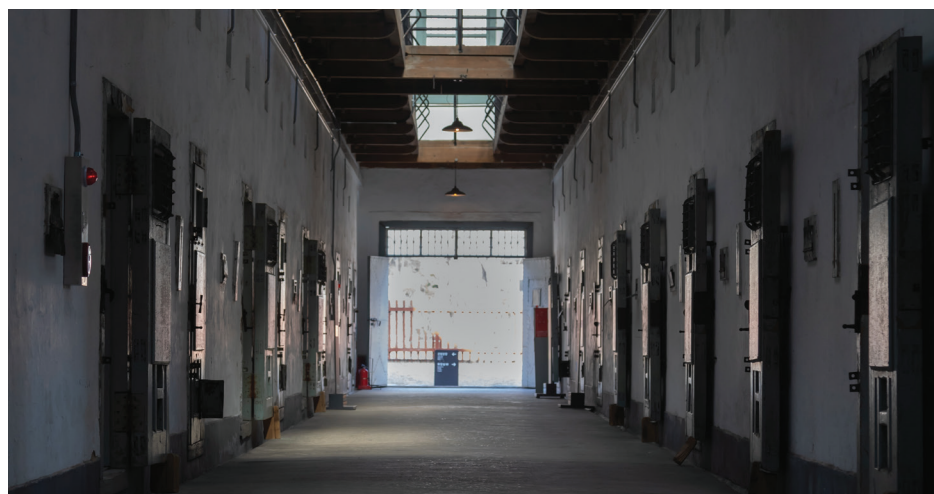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최근의 교정 처우가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한 사법 모델,

또는 재통합모델로 바뀌고 있는 추세를 반사하여 전해져 내려온 교정교화 교육이라 할 수 있는 학과교육, 종교교육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원예치료 교육, 독서 치료교육 등과 같은 정서교육과 성폭력 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교육 등 여러가지 형식의 교정교화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신용해, 2019, p12-13).

현재 일선 교도소 현장에서 교정교화교육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독서교육, 알콜사범교육, 학과교육, 인성교육, 정보화 교육, 종교교육, 정서교육, 특정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등을 통합 인성교육과 심리치료를, 취업 지원 체제로 개편하되 중간처우 제도와 접목하여 사회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회복적 사범에 기초한 교정교화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전문적 인력 선발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하여 불만하다(신용해, 2019, p13-14).

교정교화란 실정법 위반 등 반사회적 요소를 요 보호성 또는 범인성으로 보고 정상에서 이탈하거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교정교화 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호 또는 행형 작용이다(정상규, 2011, p92-92). 다시 말해 교정교화는 범죄인 및 비행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또는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재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자주적 생활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유 하게 하는 목적과 같은 취지이다(정상규, 2024, p93-94).

다만, 교정은 교육과는 달리 그 대상이 실정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가 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정상규, 2024, p17-18). 대한민국의 교정행정기구 표는 다음과 같다. 교정본부를 중심으로 4개의 지방교정청 7개의 구치소 포함 55개의 교정행정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여주에 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이다.



〈표1〉 교정행정기구표

법무부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춘천교도소 원주교도소 강릉교도소 영월교도소 소망교도소(민영)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산교도소 창원교도소 포항교도소 진주교도소 대구구치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안동교도소	대전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청주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공주교도소 충주구치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논산지소	광주교도소 전주교도소 순천교도소 목포교도소 군산교도소 제주교도소 장흥교도소 해남교도소 정읍교도소
17개 기관	19개 기관	10개 기관	9개 기관

* 법무연수원 2023년 자료

2. 북한의 교정행정 제도

1) 교정행정의 목표

형무 행정 경찰기구인 사회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북한만의 특수 형무소로 교화소는 2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수용자들이 가는 곳으로 우리의 교도소와 같다. 교화소도 일반교화소와 정치범교화소 두 가지가 있다. 교양소와 일반교화소가 모두 인민보안성 7국(교화국) 관리 대상인데, 반해 정치범교화소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한다(정상규, 2024, p16-17).

내용상 북한에서는 범죄자를 큰 범주에서 정치범과 경제범으로 나눈다. 정치범은 북한 체제를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반민족적, 반국가적 범죄자를 가리키며 이 범죄 행위에는 각종 종교를 신앙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박광식, 2011). 그리고 정치범으로 지목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서민, 2019, p21-22).

정치범 자신은 ‘정치범교화소’에 수감되며, 정치범의 가족들은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아 이미 변질된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정치범관리소’에 수감된다(정상규, 2022 p42-43). 변천과 현황으로 북한의 수용체제를 보면 정치범은 항변의 기회 없이 바로 수용소에 입소하게 되고, 가벼운 위반은 집결소, 2년 미만, 형은 교양소, 2년 이상일 때 교화소로 입소하게 된다(박광식, 2016 p39-41).

〈표2〉 구금시설별 작업시간 비교

분류	관리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기본노동	12~15시간	평균 12시간 이상	평균 12시간	평균 12~13시간
노동시간	새벽4시~ 어두워질 때까지	아침7시~ 저녁7시	아침7시~ 저녁8시	새벽5시30분~ 저녁7시
조기작업	새벽4시~ 오전6시30분	새벽5시~ 작업준비	-	새벽5시30분~ 아침7시까지
처벌노동	작업량 미달 시 새벽까지	보통 밤10시까지	작업량 미달 시 야간작업	작업량 미달 시 끝날 때까지
증언자 수용기관	요덕 관리소	수성교화소	무산노동단련대	신의주 도집결소

* 박광식, 2011:통일교육원제출자료 p22 인용 및 재구성

교화소의 작업 형태는 크게 구내작업과 구외작업으로 나뉘며 구내작업은 교화소 주벽 내에서 실시하는 취사, 청소, 목공, 봉제, 벽돌찍기 등이 있고, 구외 작업은 농장, 벌목, 석탄 채굴 등 시설 밖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밖에 보안원들을 보조하거나 다른 수용자를 감시 또는 통제하는 잡부 조, 면회장에서 일하는 면회 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정상규, 2024, p41-42).

작업장은 큰 규모의 경우 300여 명 정도이며 조직은 반장, 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서민, 2019). 정치범수용소의 작업 형태와 환경은 핵기지 건설, 위험한 갯도나 비밀갯도 등 시설공사 등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진다(박광식, 2011 p39-41). 노동강도는 탄광 1일 3교대, 일반공장 1일 2교대, 농장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남은 시간 공동근무가 부여되고 휴일도 월 1회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정상규, 2024 p47).

3. 갈등이론¹⁾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대립과 경쟁, 갈등과 변화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구조기능주의가 사회를 합의와 균형만 존재하는 이상향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면서 나온 이론이다(임형택, 2020 p35-36). 사회는 의견대립과 갈등을 가지고, 있어 항상 변화하며, 갈등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견해이다.

사회에는 무질서가 늘 존재하여 불안정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사회가 통합이 잘 되어 있고, 잘 짜인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적인 이해관계 또는 정치권력은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모든 사회는 일부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강제함으로써 유지된다는 것이다. 사회문제는 지배자의 탄압과 착취에서 비롯하며, 사회의 각 부분들 간의 관계는 협동적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4.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개인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그에 따른 보상을 말한다. 즉,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제품을 고른 대가로 돈을 내는 것과 같다. 이러한 거래는 교환이론의 기본, 이념이며.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기업과 소비자는 각자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또한, 교환이론은 마케팅의 토대가 되며 소셜 마케팅에서도 기본 원리다. 그래서 소셜 마케팅은 타겟수용자가 권장 행동을 수행하는 대가로 보상받기를 원하며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지를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교육이나 법, 커뮤니케이션 등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다른 분야와 구별된다. 그리고 동기, 기회, 능력의 유무에 따라 교육, 소셜 마케팅, 법이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송은희, 1969 p65-66).

1)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대립과 경쟁, 갈등과 변화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 구조기능주의가 사회를 합의와 균형만 존재하는 이상향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면서 나온 이론이다. 계급 사회의 적대적 모순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며 이 갈등은 어느 한 계급의 승리와 다른 계급의 몰락으로 결말이 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이다. 사회 영역에서 전체 사회 계급 간에, 또는 개인 간에, 심지어 한 개인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사회 계급들 간의 갈등은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의 대립에, 즉 적대적 모순에 근거한다. 그렇지만 ‘갈등’ 개념은 ‘적대(Antagonismus)’ 개념과 동일하지는 않다. 사회 영역의 모든 갈등의 기초에 항상 적대적 모순이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적대적이긴 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 특징적인 모순이 갈등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5. 통합이론(unification theory)

국가 간의 갈등 해소 및 경제적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전략 이론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으로 인한 서구 여러 나라들의 단결, 유럽경제공동체·유럽석탄철강공동체 등 초국가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등장한 이론이다. 각국의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서로 협력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는 제도나 체계를 자발적으로 만들자는 인식에서 나왔다.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미트라니(D. Mitrany), 하스(Ernst B. Hass), 도이치(K. Deutsh), 에치오니(A. Etzioni), 린드버그(Leon N. Lindberg), 나이(Joseph S. Nye, Jr.) 등이 있다(송은희, 1969 p61-62). 하스는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통합 당사국들의 정치엘리트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같으면서도 다원적이어야 할 것,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 경제 수준이 비슷하고 천연자원에 대해 상호보완적 관계이어야 할 것, 군사력 수준이 서로 비슷해야 할 것 등을 들었다.

여기에 지리적으로 가깝고, 통합 상대국이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통합 당사국의 정치집단 및 국민들이 우호적이면 통합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보았다(허문영 외, 2010). 개별적인 국가 차원에서 보면 복지·사회발전·체제안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강한 군사력 및 경제력이 높을수록, 관료의 능력이 높을수록 통합이 이루어지기 쉽다. 유형은 4가지가 있다(송은희, 1969 p65-66).

6. 선행연구의 검토

김명철(2010)은 통일교육원의 연구에서 세계 최악의 인권국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 유엔을 중심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과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가 북한을 강타한 1990년대 이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했다는 사실 비록 지금은 중국으로 향하는 탈북자의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광범위한 식량부족을 피하고 소득을 얻거나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탈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연구를 하였다.

중국은 이들을 난민으로서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이들을 체포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는 연구와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구금, 비인간적 처우, 고문, 강제노역과 소위 정치범 수용소 투옥은 물론 사형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인권 유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하였다(정상규, 2024 p 61-63).

경의성은 북한의 형사법은 사회주의 체제를 모든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주민들을 계급투쟁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 북한 형사법은 최고의 규범력을 가진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점으로 김일성 교시, 조선노동당 규약, 사회주의헌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령, 각종 정령·결정·명령·규정·지시 등이 단계적으로 상하위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정상규, 2016 p37-38 재인용).

북한 헌법은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집단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신분보장이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직무상의 독립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개인의 형사사법상 기본권도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 북한은 형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유추해석 허용원칙을 삭제하는 등 북한의 법과 제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민낙기, 2019 p34-35). 경의성은 통일교육원 과제물 자료에서 북한의 형집행제도는 형벌의 처벌은 물론 사회적 교양 처분과 손해 보상 청구도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에서 연구하고 있다(정상규, 2016, p21-22 재인용).

김수암은 북한의 형사 법제상 형사 처리 절차와 적용 실태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김국신,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통일연구원에서 연구하였다. 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수용시설인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에 대하여 한국행정학회에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민간단체이지만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수용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북한구금시설의 총서를 제작하여 북한수용소의 인권실태를 연구하고, 북한이탈 정신건강(PTSD) 향상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남북자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북한 이탈 여성청소년 실태조사를 2003년부터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다.

III. 독일의 교정행정 통합 사례

독일, 예멘, 베트남 같은 주요 나라의 통합 사례는 남·북한의 통합을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독일은 주변나라의 협조와 도움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었으나 베트남은 무력 통합의 절차를 거쳤으며 예멘은 통합 이후 분단되어 결국 무력으로 통합을 이룬 예라 할 수 있다(정상규, 2024).

이들 국가는 각자 다른 방식과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통합에 따른 갈등과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중 독일의 통합사례는 양 체제 국민의 합의에 의한 평화통합으로서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분단 45년(1945-1990) 만에, 통일되었다(정상규, 2024, p101-102).

거의 할수 없는 것으로 보였던 독일의 통일은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실현되었다. 독일통일은 새로운 헌법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서독의 법률과 국가제도의 기본 구조가 동독지역에 이전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서독의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회주의에 이식된 통일이었다. 어쩔 수 없었던 서독의 포용력이었다. 통일 후 동독의 5개 주는 최단기간에 의회를 구성하였고, 행정조직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계획경제는 시장경제로 전환되었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생활물자 공급체계도 재편되었다. 교육체제도 모두 서독식 모델로 개편되었다. 통일 후 가장 시급했고 어려웠던 과제는 행정통합이었다. 교정조직의 통합도 그중에 하나였다.

1. 행정통합 과정

동독의 교정제도를 어떻게 서독의 민주적 교정제도로 변형할 것인가? 독일정부는 서독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구동독 교정조직과 교정시설을 주 정부에 이관했다. 주 정부의 교정법이 발효되면서 구동독 교정조직의 해체 및 개편작업이 착수되었다. 주정부 교정청은 교정과 무관한 분야를 분리해 나갔다. 이후 재심사, 직원교육 및 훈련, 재연수가 실시되었다. 5개 주 교정청은 서독의 주 교정청과 각각 자매 결연을 맺었고, 인적, 물적 지원을 받았다(정상규, 2024, p101-102).

1) 교정조직 개편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교정 고위직은 모두 서독 출신으로 교체되었다. 남은 하위직은 재임용신청을 통해 개별 심사를 받았다. 재임용은 적성, 능력, 전문성에 따라 결정되었다. 통일조약 제13조 제1항, 제20조, 통일조약 제1문서가 그 법적 근거였다. 충격을 흡수하고, 민주주의 공동체에 같이 융화되어 간다는 법 규정이었다(정상규, 2024, p103-104).

2) 인적 청산

인적 청산이 문제였다. 서독식 표현으로 인적 정비였다. 이것은 교정조직에 일대 변화를 몰고 왔다. 55세 이상 교정공무원은 재임용에서 탈락됐고, 연금생활자로 편입되었다. 하위직 동독 교정공무원은 약 50%를 재임용했다. 인적 정비기준은 과거의 근무부서가 아니라, 활동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세계적인

권선언에 규정된 인권침해행위는 재임용 탈락의 첫 번째 기준이었다(정상규, 2024, p105-106).

3) 인적 충원

통일 후 5개 주의 교정청은 각각 교정전문학교를 운영했다. 신규채용과 재교육이 실시되었다. 신규채용 인원은 매년 60명, 3년 과정이었다.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자였다. 예산은 주 정부에서 지원했고, 교육생에게 월 1400 DM(84만 원)가 지급되었다. 당시 동독지역 실업률이 공식통계로 16%, 암수통계로 30%였다. 교정공무원은 구 동독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주 정부는 젊은 교정이 향후 교정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다(정상규, 2024, p106-107).²⁾

4) 문제점

그러나 인적 재정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수구 세력 간의 내부 갈등과 신·구세력 간의 심리적 갈등이었다. 서독출신 고위직 간부와 동독 출신 교정공무원 그리고 동독 출신 교정공무원 내부의 신·구 세대 간의 갈등은 심각했다(정상규, 2024). 새로운 장벽, 마음의 분단이 여기에도 있었다.

서독 출신 간부들은 동독 출신 동료들에게 창의력, 결단력, 분쟁해결 능력이 없고,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르기만 하고, 권위적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동독 출신 교정공무원들은 서독 출신 간부들을 향해 지나치게 거만하며 동료 의식도 없고, 형식적인 업무 관행에만 집착한다고 비난했다. 40년 동안 이질화된 교정행정문화가 만들어 놓은 장벽이었다(서민, 2020, p16-17).

신구 세력 간의 갈등도 보다 증폭되었다. 동독 출신 교정 공무원과 신규임용 교정공무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상호 불신이 컸다. 서독식 직무교육을 받은 젊은 교정공무원들은 그들은 아직도 동독의 관행에 젖어 있고, 복지부동이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모른다.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³⁾

2) [www.moj.go.kr] III. 한국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의 방향 - 법무부

3) 데이비드 호크, “잔인함의 집결”(도서출판 시대정신, 2007)

〈표3〉 동·서독사람들의 행동양식 비교

분류	동독사람들	서독사람들
문화적 기틀	구소련의 독재하에서 시민사회의 민주적인 전통과 민주적인 구조와 단절, 권위적 국가로 전락.	2차 대전 이후 민주적인 전승국들에 의해 급진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자유체제를 공공히 함.
성 격	조용하다. 겸손하다. 소심하다.(안정에 대한 욕구) 불안하다. 말이 적다. 느리다. 촌스럽다	시끄럽다. 자유스럽다. 역동적이다.(모험적이다) 자신있다. 달변이다. 서두른다. 국제적 감각이 있다.
특 징	집단에 순응한다. 튀지 말아야 한다. 잘못하면 안 된다.	개인의 인격을 형성한다. 튀지 않으면 안 된다. 유연하다.
성 향	사회적 시각 기존질서에 적응한다. 목적에 관심이 있다. 결함과 타협하며 산다.	경제적 시각 타인을 밀치고 앞장선다. 경제, 금전에 관심이 있다. 과잉과 풍요속에 산다.
삶의 모습	따분하다. 형식적이다. 국가에서 조종한다.	유혹이 도처에 널려있다. 개방적이다. 개개인이 만들어간다.

* 2016년도 통일교육연구원 자료

5) 물적 통합과 문제점

먼저 구 동독지역에 연합으로 교정청이 한시적으로 신설되었다. 교정청은 구 동독 지역 교정조직이 보유한 모든 동산(動産)에 대한 물품조사와 기술적 장비 분배방안을 준비하였다. 이 기구를 통해 무엇이 어떤 주에 어떻게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목록표를 만들어 정비하였다. 1991년 7월 26일, 8월 28일, 10월 29일 세차례에 걸쳐 각 주에서 파견된 자에게 교부되었다(남준락, 2015, p29).

각 주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통보를 한 후 지역 교정청에서는 각 주별로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였다. 하나의 물품에 대하여 여러 주(州)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경우에는 기획팀이 작업을 근거로 어떤 주에 그 물품을 이양할 것인가를 작업반에서

결정하였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5개 주 교정대표자들의 타협에 따라 브란덴부르크 내무부가 처리하였다(정상규, 2024, p112).

6) 법적 분쟁 사례들

독일통일 후 인적 청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줄을 이었다. 교정공무원과 직접 관련된 사례는 아니지만, 독일통일 후 공무원 관련 분쟁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네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통일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정상규, 2024, p121-122).

(1) 구동독 경찰관이 제기한 해임에 대한 헌법소원(BVerfGE 92, 140)

(가) 사실관계

사회주의 통일당(SED) 열성 당원의 전력을 지닌 동독 인민경찰(Volkspolizei)의 한 경사가 사회주의 통일당과 슈타지(Ministerium für die Staatssicherheit, MfS: Staatssicherheitsdienst, Stasi, 국가공안국) 경력 때문에 정식 해임되었다.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경찰직에 이 경사가 종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해임 이유였다. 이 경사는 베를린주 노동법원(Landes-arbeitsgericht)에 노동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주 법원은 해임을 확정하였다.⁴⁾ 경사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BVerfG)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정상규, 2024, p114-115).

(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1995년 2월 21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E 92,140)는 베를린 주(州) 노동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통일조약은 동독의 공무원들을 독일연방공화국의 공직에 광범위하게 흡수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수한 해고 근거로는 동독 시절 인간으로서의 기본가치와 법치국가의 원칙을 위배했을 때, 또는 과거에 국가공안부를 위해 활동하였을 때이다(남재성 외, 2005, p23-24). 고용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중지해야 할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결정되어야 한다.

4) [www.moj.go.kr] III. 한국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의 방향 - 법무부

“구동독 시절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목표에 부합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동독 공직자들에게 요구된 원칙을 지킨 것, 다시 말하면 동독 공산정권과의 밀착 정도로서만 해고할 수는 없고, 자격 미달이나 업무태만 등 다른 요건이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신의기 외, 2010)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과거에 저지른 직무상 과오(범죄행위)와 과거경력(활동부서)을 구분한 결정으로 기존 공무원의 해고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대기발령 판결(Warteschleifenurteil, BVerfGE 84, 133)

독일통일 이후 현실로 나타난 문제가 직위해제이다. 1991년 4월 24일의 대기발령 판결(Warteschleifenurteil BVerfGE 84, 133)을 살펴보고자 한다(하태영, 2006, 27-28).

(가) 사실관계

동독의 국가공무원들은 통일조약에 따라 그 직무가 연방정부 혹은 주(州)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었고, 통일 후 각각 해당주(州)의 관할로 이동하게 되었다. 담당 업무가 소멸된 고용 관계는 6개월의 기간 동안 기존의 평균봉급 70%가 지급되는 《휴직하는 형태》로 청산되었다. 이러한 《대기발령》 끝에 복직 혹은 해직 그리고 퇴직이 뒤따랐다.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여 3백2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받은 것은 아니다”고 결정하였다. 결정 이유를 보면, 구동독에서의 고용자 수는 노동력 실제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인원감축 없이는 연방과 연방주들의 재정 능력에 아주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 이를 회피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국민경제와 납세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공공자금을 절약하여 지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으로 해직과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해직으로 인해 임산부 보호(Mutterschutz) 규정을 어기게 될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장애인과 나이 많은 고용인 그리고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정상규, 2024, p123).

(3) 판·검사에 관한 2건의 결정(BverfGE 87, 68, 95)

(가) 사실관계

판사선출위원회는 판사들중에서 선출된 4명과 새로 구성된 후 각 주의회에서 선출된

6명의 위원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 이후 새로운 상황에서도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판사와 검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연방주의, 사회적 복지주의 그리고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법치국가에 대한 신념, 도덕적·정치적인 청렴, 전문적인 자격 및 재교육에 대한 준비,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정상규, 2024, p127).

그때 동독 판사들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던 사회주의통일당 당적은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었으나, 적극적으로 당 활동을 한 경우는 그 사정이 달라졌다. 여기에는 검사와 판사들이 관여하였던 판결문들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젊은 판사들이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정치적인 형사사건에 관여할 기회를, 아직 많이 가지지 못했었기 때문에 독일통일 후 새로운 상황에서 옛 사회주의통일당 판사들보다 재임용될 기회가 많았다(하태영, 2006). 판사선출위원회로부터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추천된 자들은 주(州)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후 3년간의 시보 기간을 거쳐야 했다. 이 시보 기간은 2년간 더 연장될 수도 있었다. 그 후 평생 근무할 수 있는가, 혹은 해직되는가의 여부가 결정되었다. 구동독 시절에 재직하였던 판사와 검사들의 60% 정도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정상규, 2024, p128).

(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해직된 자들은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률에 호소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작센주에서는 재임명이 탈락한 판사들에게 법관복무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되었다.⁵⁾ 연방헌법재판소는 1992년 7월 8일 법관복무법원의 제청에 의한 판·검사에 관한 2건에 대한 결정(BverfGE 87, 68쪽, 95)에서, 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이 해직에 관한 재심사를 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판사직 혹은 검사직에 임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이지, 직무상의 과오로 인한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작센주는 주법률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였다. 단 한 명의 해직 판사가 연방행정법원에까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행정법원은 1995년 11월 6일 그 소송을 기각하였다(정상규, 2024, p124).

▶ 다음 호에 이어서

5) [www.moj.go.kr] III. 한국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의 방향 - 법무부

수용자의 권리행사와 제한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정혜림
서울구치소 총무과

목차

- I. 들어가며
- II. 수용자의 권리행사
- III. 제한 방안
- IV. 마무리

참고문헌

I. 들어가며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처우나 권리침해가 존재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수용자가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118조)고 규정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과 수용자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용자거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최소한의 수감 조건의 기준을 제시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서는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매일 교도소장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교정직원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제56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수단으로는 비사법적 구제 수단과 사법적 구제 수단이 있다. 비사법적 구제 수단으로는 소장면담(형집행법 제116조), 청원(형집행법 제117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법무부 인권국 진정,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3조) 등이 있으며, 사법적 구제 수단으로는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배상소송 등이 있다.

또한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형집행법 제117조의2 제1항),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동법 제234조 제1항).

II. 수용자의 권리행사

1.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제한

형집행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교정시설은 수형자 등을 구금함으로써 그 형을 집행하고 이들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수형자 등은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리된 구금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기 마련이나,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한되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역시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날 수 없다.¹⁾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된다.

2. 수용자의 권리남용과 문제점

수용자가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직원을 괴롭히기 위하여 권리행사라는 명목으로 수용자의 불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헌법재판소법, 행정심판법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통신기기는 수용자가 소지할 수 없으므로(형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2호) 수용자가 직접 손으로 쓴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곳에서 많은 양의 권리구제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업무는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직무 피로도를 가중시킨다. 헌법소원 청구나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되므로 수용자 본인이 권리행사를 통하여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표1〉 최근 3년간 교정공무원 피고소·고발 현황²⁾

(단위 : 건, 명)

연도	건수	피소 인원	진행중	결과(피소 인원 기준)							
				계	무혐의	죄안됨	기소 유예	기소	공소권 없음	각하	기타
2021	719	1,530	102	1,428	203	11	2	-	5	1,000	107
2022	716	1,537	476	2,074	1,061	205	1	-	-	6	801
2023	677	1,385	261	1,124	323	1	-	-	6	757	37

1) 2015헌마36, 2016. 6. 30.

2)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138쪽

3. 권리남용 요건과 효과

현행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권리남용을 정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나 효과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권리의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가 존재가 전제된다. 대법원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을 모아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아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³⁾며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수용자의 권리행사가 수용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 수용자의 권리남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고 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 아니라 헌법재판도 포함된다.⁴⁾ 재판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 중 하나로, 최대 보장이 원칙인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4) 2012헌마2, 2014. 4. 24.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입법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5. 헌법소원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 각하된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행정상의 사실 행위는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 사실행위의 목적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2) 헌법재판소의 심판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70조 제1항), 수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면 수용자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표2〉 최근 3년간 수용자 헌법소원 청구 현황⁵⁾ (단위 : 건)

연도	청구 건수	진행 중	결과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2021	58	14	44	-	2	32	10
2022	49	14	35	-	2	28	5
2023	19	6	13	-	1	10	2

5) 2024 교정통계연보, 141쪽

(3)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수용자가 제기하였거나 형집행법 관련 결정례 67건 중 주문이 기각인 결정은 한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문이 모두 각하결정이었다.

〈표3〉 부적법 각하 사유⁶⁾ (단위 : 건)

사유	건수	사유	건수
직접성 부존재	12	공권력 행사 부존재	13
기간 도과	9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부존재	17
의무 부존재	6	보충성 부존재	12
해명 필요성 부존재	13	대상성 결여	3
권리 침해 가능성 부존재	8	일사부재리 위반	4
전제성 부존재	2		
총합		99	

각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제일 많았고, 해명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설립된 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다양한 결정이 축적되어 왔다. 설립 초기에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적 해명이 완료된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안도 증가하고 있다.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수용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 시에는 사실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결정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6) 하나의 결정에 여러 가지의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6. 행정심판 청구

-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 처분취소 등이 심판청구 대상이다.

〈표4〉 최근 3년간 수용자 행정심판 청구 현황⁷⁾ (단위 : 건)

연도	청구 건수	결과					
		계	전부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취하
2021			-	2	131	105	205
2022	382	331	-	-	87	109	135
2023	610	471	-	3	149	128	191

- (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 (3) 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정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4곳의 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⁸⁾ 위 위원회는 모두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지방교정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청 내규 제18호 등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위원회는 위원장(서울지방교정청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8명의 위원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7)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139쪽
8) 서울청, 대구청, 대전청 및 광주청 총 4곳

7. 정보공개 청구

- (1) 공무원증 번호나 교도관의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등 실질적으로 수용자의 알 권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행자인 청구인이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 청구하거나 10년 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번에 청구하고, 정보의 공개 방법을 실제 수령할 수 없는 방법인 전자우편으로 하였으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공개 결정된 자료를 수령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⁹⁾
- (2)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고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3)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동법 제9조 제1항),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¹⁰⁾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동조 제1항 제4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고,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익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널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적어도 직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즉,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익실현과 관련이 없다면 알 권리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9) 무분별·반복적인 ‘악성’ 정보공개청구...“권리남용에 해당”, 2024. 6.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책브리핑
1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표5〉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현황¹¹⁾

(단위 : 건)

연도	법무부	교정기관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 중)	기타 취하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21	80,640	52,561	31,132	26,017	2,758	2,357	0	21,429
2022	84,503	50,528	27,942	24,517	2,366	1,059	-	22,586
2023	57,248	39,581	37,523	33,152	2,839	1,532	14	19,711

(5)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비공개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6)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라는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다.

(7) 문서·도면 등과 전자파일 사본(종이출력물)의 수수료는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이며,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이다(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수수료는 전자금융법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수입인지로 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현행 정보공개법령에는 한 장당 출력할 수 있는 쪽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권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국민의 알 권리를

11)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143쪽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문서 한 장당 제공할 수 있는 쪽수나 글자 크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보공개 예상비용의 세부적인 납부방법 및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8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정규칙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8) 정보공개 신청을 한 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표6〉 최근 3년간 정보공개 구제절차 처리 현황¹²⁾

(단위 : 건)

연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 건수	처리 결과			청구 건수	계류 중	심판 결과			제기 건수	계류 중	판결 결과		
		각하 (취하)	기각	인용			각하 (취하)	기각	인용			각하 (취하)	기각	인용
2021	286	69	167	50	34	2	11	11	10	8	4	3	-	1
2022	143	44	82	17	52	3	37	12	-	7	5	2	-	-
2023	230	39	125	66	245	0	200	41	4	20	13	5	1	1

공개결정에 불복한다면, 비용의 부담이 있는 행정소송보다는 비용의 부담이 적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수용자는 서면이나 구두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은 열람이 금지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자의 진정권은 보장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는 점을 알 수 있다.

12)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146쪽

〈표7〉 최근 3년간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현황¹³⁾

(단위 : 건)

연도	진정 건수	권고		수용여부			
		건수	비율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 중
2021	4,522	23	0.5	21	2	0	-
2022	4,187	36	0.9	34	1	1	-
2023	4,530	46	1.0	36	8	2	-

수용자가 제기한 진정 건수에 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의 비율은 1% 남짓이다.

- (2)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수용자가 재정신청 취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위조해 제출하였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들을 허위 진정하고 취하를 조건으로 수감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려 한 점을 이유로 법원은 무고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¹⁴⁾

9. 행정소송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행정소송의 소가를 정하고 있는데(제17조) 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의 위법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동조 제4호).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하므로(제18조의2),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에 해당한다. 소가를 부담해야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없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청구 사유는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무효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등이다.

13)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137쪽
14) 인권위에 허위 진정한 수형자 실태, 2003. 1. 22. 법률신문

〈표8〉 3년간 수용자의 행정소송 청구 현황¹⁵⁾

(단위 : 건)

연도	청구 건수	진행 중	결과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2021	61	12	49	2	11	20	16
2022	56	35	21	2	-	6	13
2023	70	49	21	2	4	3	12

III. 제한 방안

1. 수용자에게 안내

수용자에게 행정소송의 제기나 헌법소원 청구의 경우 처분이 종료되었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허위 사실로 진정하거나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형법상 무고죄(제156조)¹⁶⁾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여야 한다.

2. 법령 개정

(1) 심판청구 비용의 차등적 부과 방안

현행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한다는 점에서 심판청구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무분별한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전혀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누진세와 같이 총 심판청구 건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전 단계와의 비용 차이는 점증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적이 없거나 심판청구의 횟수가 적은

15)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140쪽
16)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구인에게는 심판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건수부터 얼마의 비용을 부과할 것 인지는 행정심판 청구 건수, 행정심판 업무의 과중도, 입법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에게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2) 정보공개 청구 제한

1)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를 활용할 의사가 없거나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 등 정보청구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9〉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건수¹⁷⁾
(단위 : 건)

구분	2021	2022	2023
청구 건수	1,642,959	1,818,425	1,842,358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3년간 상위 10명이 청구한 정보공개 신청 건수는 약 119만 건(21년 36만 건, 22년 58만 건, 23년 25만 건)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정보공개 청구자는 해당 서류를 수령조차 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 청구 오남용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¹⁸⁾ 정보공개 청구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¹⁹⁾

2) 정보공개 청구의 이익이 없음에도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종결처리 될 수 있도록 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기 위한 수수료를 납부

17)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18) 정보공개청구 3년간 511만 건 중... 10명이 119만 건 신청, 2024. 9. 16. 로이슈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835)

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수용자가 다른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미납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다른 공개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3) 보관금에서 공제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결정(부분 공개결정을 포함한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개된 정보의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10배 이내에서 보관금을 공제하도록 형집행법 제117조의2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청구자의 수, 공개된 정보의 양, 업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배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위 규정에 따라 공제된 보관금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국고금에 귀속하고,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도록 형집행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IV. 마무리

수용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그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권리의 행사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권리를 잘못 행사하거나 과도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권리행사도 수형자의 교정·교화라는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김준호, 민법강의 제20판
KOSIS 국가통계포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 2009

대마초 사용자들의 강성 마약류 사용과 중독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하)



유숙경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IV. 연구 결과

1. 자료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개의 개별 주제로 압축되었다. 이를 다시 유사하거나 동일한 주제들끼리 결집하여 9개 주제의 범주를 제시하였고, 주제의 범주를 중심으로 분석 단위에 재배열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는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개인적, 환경적 조건들이 어떻게 강성 마약 사용의 계기가 되는지, 그리고 사용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강성 마약 사용이 초래하는 다양한 결과들을 개인과 환경적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 자료 분석 결과

분석단위	주제 범주	개별주제 압축
강성마약 사용 계기	패락의 상승 욕구	• 대마초에서 경험하지 못한 강렬한 도취 경험 추구(1,3,8,9,12,13) • 대마초는 초등학생 필로폰은 대학생(2,4,7,10) • 안전하고 극단적인 황홀경에 대한 동경(5,6,11)
	개인적 조건	• 마약 사용 집단에서의 지위 향상 • 본드와 대마초는 하루 취급당함(2,3,4,7,10,11,13) • 코카인은 귀족(5,6,11) • 필로폰은 패락과 힘의 상징(1,8,9,12)
	마약 경각심의 실증	• 대마초로 큰 피해가 없었기에 마약도 가능할거라 예측(2,6,9,10,11,12) • 마약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자만심(1,3,4,5,7,8,13)
	마약 시장의 뒤통에 빠짐	• 대마초 처벌 전력은 마약 밀매자들의 잠재적 소비자(1,2,3,5,6,8,13) • 대마초 친구의 마약 권유(4,7,9,10,11,12)
	환경적 조건	• 치료 시스템의 부재 • 대마초를 끊고자 해도 방법을 모름(1,2,3,5,6,7,10,11,12,13) • 강성 마약 사용 후 후회와 단약 의지가 있었으나 처벌이 두려움(4,8,9)
	낙인에 대한 반동적 저항과 도피	• 주변의 낙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4,7,11) • 버려진 몸 신드롬(1,5,8,10,12,13) • 낙인과 편견의 도피처 마약(2,3,6,9)
강성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	개인적 조건	• 패락의 노예 • 이 세상 어떤 패락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패락(1,2,7,8,12,13) • 나의 삶 전부를 지배하는 마약(3,6,9,10,11) • 마약세계에 따라 움직이는 일상(4,5)

강성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	개인적 조건	체념의 학습과 내재화	• 대마초·마약으로 이어지는 삶은 패배한 인생(1,2,1,5,9,12) • 대마초를 끊지 못했기에 마약도 끊을 수 없음(3,6,8,9,10,11,13)
	환경적 조건	마약 사용, 밀매자의 이중 지위	• 마약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밀매자로 전환(3,4,5,13) • 나의 몸은 마약판매를 위한 테스트 베드(2,6,7)

1) 강성 마약 사용 계기

강성 마약 사용 계기는 개인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교정 정책 마련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1) 개인적 조건

개인적 요인은 쾌락의 상승 욕구, 마약 사용 집단에서의 지위 향상, 마약 경각심의 실종으로 구분된다. Fergusson과 Horwood(2000:507)는 대마초 사용이 쾌락 추구 욕구를 강화하여 강성 마약 사용으로 전환된다고 보고하였다. Hasin과 동료들(2016:1235)은 마약 사용 집단 내에서 지위 향상이 강성 마약 사용의 중요한 동기라고 밝혔다. Peacock과 동료들(2018:1910)은 대마초 사용의 일반화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어 강성 마약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언급하였다.

① 쾌락의 상승 욕구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 마약 사용으로의 전환은 주로 쾌락의 상승 욕구에 의해 발생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마초 초기 사용 후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강렬한 도취 경험을 찾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Fergusson과 Horwood(2000:505-520)는 대마초가 쾌락 추구 욕구를 강화하여 더 강력한 마약 사용을 유도한다고 지적하였다. Hasin과 동료들(2016:1235-1242)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한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Hall과 Lynskey(2005:39-48)는 대마초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며,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마초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강성 마약은 더 극단적인 황홀경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이를 동경하게 된다.

대마초는 그냥 그래요. 어떤 때는 품질 나쁜 딸을 피면 그냥 멍송멍송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말할까요? 약한 술 먹다가 센 술 찾는 것처럼 대마초 갖고는 안 되겠다. 이미 그 맛을 알았으니까... 좀 더 센 걸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갖고 그냥 필로폰으로 넘어갔어요.[연구참여자13]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헛소리 했데... 코카이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해요. 코카인은 중독성이 덜하다. 그리고 몸에도 해를 덜 거친다. 근데 그 쾌락은 무지무지하다. 대마초가 10이면 이거는 뭐 100이다 이런 생각 하게 됐어요.[연구참여자5]

② 마약류 사용 집단에서의 지위 향상

마약류 사용 집단 내 지위 향상은 마약의 종류와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Fergusson과 Horwood(2000:505-520)에 따르면, 본드와 대마초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하류층의 마약으로 여겨진다. 반면, Hall과 Lynskey(2005:39-48)는 코카인이 고가의 약물로 상류층이나 엘리트 계층에서 사용되며, 사회적 지위를 높여 준다고 설명하였다. Hasin과 동료들(2016:1235-1242)은 필로폰이 강렬한 쾌락과 에너지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마약류 사용 집단 내에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마약류 사용 집단 내 지위 향상은 사용되는 마약의 종류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마약 중에서 가장 끝판왕은 코카인이에요. 코카인은 비싸기도 하고 또 안전해요. 미국의 배우들은 다 코카인 해요. 코카인 파티는 필로폰처럼 모텔방에서 빨아대는 게 아니라... 수영장에 있는 저택...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코카인을 하면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죠.[연구참여자5]

저는 처음에 본드 했다가 대마초 했는데... 대마초를 하니깐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아이 마약에도 급이 있구나. 참 말도 안 되지만 이왕 할 거야 큰 거 하자 그냥 풀떼기 풀떼기에서 이젠 수사로 넘어간다.[연구참여자2]

③ 마약 경각심의 실종

마약 경각심의 실종은 대마초 사용 후 큰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강성 마약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마초

사용 후 큰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강성 마약도 안전할 것이라고 잘못 예측했다. Fergusson과 Horwood(2000:505-520)는 대마초 사용 후 큰 피해가 없었던 경험 이 사용자를 강성 마약으로 이끄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Hall과 Lynskey (2005:39-48)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자만심이 마약 사용의 경 각심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Hasin과 동료들(2016:1237)은 이러한 잘못된 예측과 자 만심이 마약 사용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진 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대마초 사용 후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경험과 자만심은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생각해 보니까 저 필로폰도 끊었지만, 필로폰에 중독되었을 때 아예 대마초 필 때 내가 걸렸으면 좀 경각심도 있고 그럴 텐데 대마초라는 게 원래 잘 안 걸려요. 또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구할 수가 있으니까. 마약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연구참여자1]

대마초는 딴 거에 비해 금단 현상도 좀 약해요. 없는 거는 물론 아니죠. 대마하면서 도 할 건 다 했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자제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대마도 이렇게 하는데 뭐 그깟 마약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겠다는 교만함이 굉장히 컸어요. [연구참여자3]

(2) 환경적 조건

환경적 조건은 마약 시장의 뒷에 빠짐, 치료 시스템의 부재, 낙인에 대한 반동적 저항과 도피로 분류할 수 있다. Deza(2015:159-180)는 마약 시장의 뒷에 빠지는 마약 공급자가 대마초 사용자에게 강성 마약을 권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Carvalho와 동료들(2019:263)은 많은 국가에서 마약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 시스템이 부족하여 사용자가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Melberg와 동료들(2010:28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반동적 저항과 도피는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개인이 더욱 강력한 마약을 사용하여 반항하거나 도피하려는 경향을 설명한다.

① 마약 시장의 뒷에 빠짐

마약 시장의 뒷에 빠짐은 대마초 사용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마약 밀매자들의 잠재적 소비자가 되기 쉽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Hall과 Lynskey

(2005:40)는 이러한 처벌 전력이 마약 밀매자들이 이들을 타겟으로 삼아 접근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대마초를 사용했던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강성 마약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았다. Hasin과 동료들(2016:1236)은 대마초 사용자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강성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Fergusson과 Horwood(2000:505-520)는 대마초 사용이 친구나 지인의 영향으로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마초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강력한 마약에 접근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전 대마초 피다가 벌금형 받았는데 초범이고 해서 그랬죠. 벌금형 받으니까 좀 아찔하고 그래서 안 와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떡해? 내가 대마초인 걸 알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접근해요. 유학가는데 한 번 해본 게 있으니까 금방 넘어갔죠. [연구참여자1]

대마초 같이 하던 친구인데 한동안 못 만났죠. 전 대마초 때문에 걸린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걸렸고 처벌받았는데 한 2년 지나... 찾아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완전히 마약 밀매꾼이 되더라고. 어차피 우리는 서로가 약점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코 풀면(고발), 나 대마초 한 것도 걸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연구참여자3]

② 치료 시스템의 부재

치료 시스템의 부재는 대마초 사용자가 이를 끊고자 해도 방법을 몰라 좌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Fischer와 동료들(2015:11)은 많은 대마초 사용자들이 중독을 자각하고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과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실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성 마약 사용자들은 단약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약을 사용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보고되었다(Hasin et al., 2016:1239). Hall과 Lynskey(2005:39-48) 역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는 치료 시스템의 부재가 중독 문제 해결에 큰 장애물임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무리 중독자라고 해도 한 번, 두 번은 끊으려고 해요. 그런데 끊으려고 하는데도 어떡해? 끊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 가서 상담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한참 헤매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연구참여자5]

처음 필로폰을 하고 생각을 했죠. 큰일 나겠다. 끊어야겠다. 대마초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더라고 또 비싸니까 살림살이도 거덜 날 것 같고 근데 나 혼자 못 그러니까 치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경찰서에 가야 되고 검사한테 불려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연구참여자4]

③ 낙인에 대한 반동적 저항과 도피

낙인에 대한 반동적 저항과 도피는 마약 사용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버려진 몸’으로 인식하게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마약을 도피처로 선택하게 만든다. Link와 동료들(1989:402)은 낙인과 편견이 마약 사용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고, Fischer와 동료들(2015)은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마약 사용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Hasin과 동료들(2016:1235-1242)은 낙인과 편견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마약을 도피 수단으로 사용하게 만든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낙인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고통은 마약 사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환경적 조건으로 작용하며, 이는 마약 사용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

대마초를 하든 필 하든 구분을 못해요. 대마초든 필로폰 하든 그냥 약쟁... 끊었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거기서 도망갈 수 있는 일은 길은 끊는 건데 끊지를 못하고 그냥 또 다른 마약으로 넘어간 거예요. 전 코카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연구참여자2]

항상 이왕 버린 몸... 지금 와서 뭐 약 끊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처음에 비 오는 날 흙탕물 안 튀기려고 조심해 가다가 흙탕물 튀기면 막 가잖아요. 똑같아요. 갈 때까지 가는 심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 끝이 어디였어요?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뭐 닥치는 대로 마약을. [연구참여자8]

2)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면, 이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마초 사용은 초기에는 상대적

으로 무해하다고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1) 개인적 조건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에 기여하는 두 가지 주요 측면은 쾌락의 노예와 체념의 학습 및 내재화이다. Fergusson과 Horwood(2000:505-520)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은 강력한 쾌락 추구 경향을 강화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만든다. Hasin et al. (2016)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가 더 강력한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경향을 설명하며, 이는 대마초만으로는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내재화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Hall과 Lynskey(2005)는 대마초가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해 쾌락을 증가시키며, 이는 강성 마약 사용을 지속시키는 생리적 기전이 된다고 언급했다. Peacock과 동료들(2018:1910)도 초기 대마초 사용 연령이 낮고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① 쾌락의 노예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에 기여하는 주요 측면 중 하나는 쾌락의 노예가 되는 과정이다. Fergusson과 Horwood(2000:505-520)는 대마초 사용이 강력한 쾌락 추구 경향을 강화하여 최고의 쾌락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는 마약이 사용자의 삶 전부를 지배하고, 마약 세계에 따라 움직이는 일상을 만들게 한다. Hasin과 동료들(2016:1236)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강성 마약 사용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돈도 출세도 명예도 어떻게 보면 쾌락인데 한번 뽕을 해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섹스를 해도 한 100배 높다고 할까 그러니까 어떤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연구참여자8]

마약에도 시계가 있어요. 한 번 끊으면 다시 하고 싶고 끝나고 나면 금단 증상이 엄청나게 오니까 그건 말로 할 수도 없어요. 또 해야 되고 마약 살 돈을 구해야 되고 안 되면 도둑질이라도 하게 되고 이제 내 정신은 다 빠져나가고 마약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5]

② 체념의 학습과 내재화

체념의 학습과 내재화는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Hasin과 동료들(2016:1239)은 대마초 사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력한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며, 이는 사용자가 대마초와 마약으로 이어지는 삶을 패배한 인생으로 체념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마초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마약도 끊을 수 없다는 내재화된 믿음으로 이어진다.

대마초도 했고, 본드도 했을 텐데... 필로폰까지 했죠. 평생에 대마초 한 번 하기 어렵고 뽕 한 번 하기 어려운데 연속으로 하니까? 인생은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맨정신에는 아 좀 다시는... 생각하는데, 마약을 하면 이런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연구참여자12]

대마초 할 때는 마약 그까짓 거 끊을 수 있어 했는데 마약하고 대마초하고 연결돼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끊지 못했고, 자신이 없어지고, 길에서 쓰러져 죽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거니까 마약을 할 기회만 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연구참여자13]

(2) 환경적 조건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에 있어 환경적 조건 중 하나는 마약 사용자가 동시에 밀매자로서의 이중 지위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조건은 마약 사용을 단순한 소비에서 벗어나 경제적 동기까지 확대시키며, 결과적으로 강성 마약 사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① 마약 사용, 밀매자의 이중 지위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와 유지에 있어 환경적 조건 중 하나는 마약 사용자가 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밀매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Hall과 Lynskey(2005:41)는 마약 사용자가 밀매자의 역할을 병행하면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고 경제적 이익이 생기며, 이로 인해 마약 사용이 더욱 강화된다고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자신의 몸을 마약 판매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게 되어 강성 마약 사용을 지속하게 된다. 따라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금전이 확보되자 단약 의지보다는 마약 사용 의지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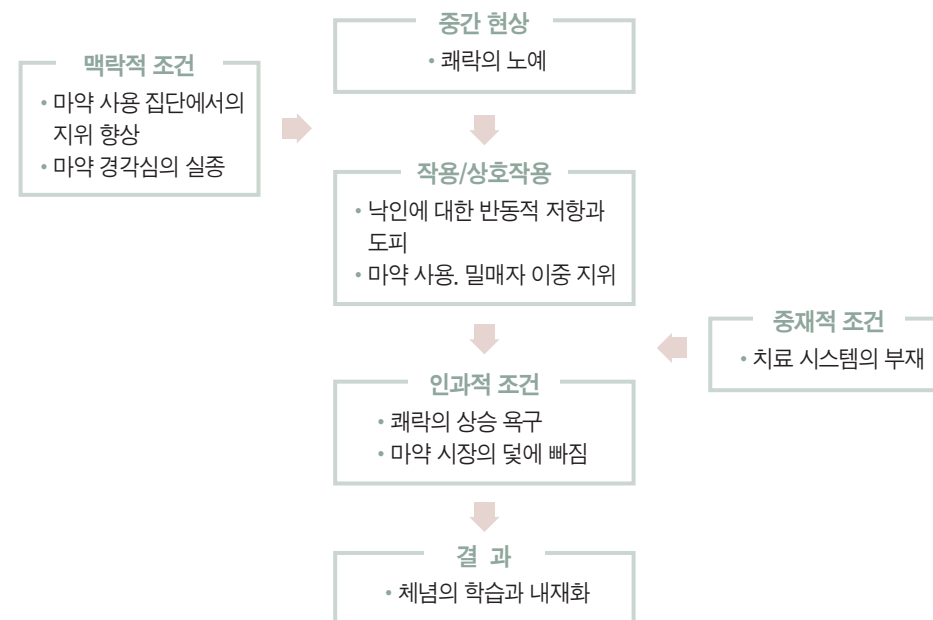
전 마약을 하고 팔기도 했는데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마약왕처럼 엄청난 거금을 벌지는 않고... 약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약하는 사람들을 알게 돼요. 야금야금 팔죠. 만약에 그때 내가 살 돈이 없었으면 억지로라도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팔기까지 하니까 더 하죠. [연구참여자3]

새로운 약이 나오거나 뭐 다른 게 나오면 뭘 알아야 팔아야죠? 제일 먼저 내 몸에다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끊을 수 없고 중독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마약만 파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 판매까지 하는 사람들은 진짜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연구참여자7]

2. 논리적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조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델을 이용하였다. 패러다임 모델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상의 진행과 이에 미치는 맥락, 개인들의 작용과 상호작용, 그리고 그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를 통해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 마약 사용으로의 전환 과정과 그 영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림1〉 논리적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구조 분석



1)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인과적 조건이란 중심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중심 현상은 ‘쾌락의 노예’로 나타났으며, 이를 야기한 주요 인과적 조건으로는 ‘쾌락의 상승 욕구’와 ‘마약 시장의 덫’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은 초기에는 가벼운 쾌락을 제공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렬한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대마초 사용이 쾌락의 상승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같으며, 그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한다. Fergusson과 Horwood(2000:505-520)는 대마초 사용이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를 강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사용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 쾌락을 얻기 위해 더 강력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진다.

구조적 요건으로는 마약 시장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이 있다. 마약 시장은 소비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소비를 창출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마약 밀매자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비자를 찾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들을 현혹한다. Hall과 Lynskey(2005:43)는 마약 밀매자들이 대마초 사용자들을 잠재적 소비자로 인식하고 접근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마초 사용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마약 밀매자의 타겟이 되며, 강성 마약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마약 시장의 덫은 스스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이며, 덫에 걸린 사람은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마초를 가볍게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마약이라는 강렬한 울무에 걸려버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Hasin과 동료들(2016)은 마약 밀매자들이 대마초 사용자들에게 강성 마약을 권유하면서 이러한 덫을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요 인과적 조건은 쾌락의 상승 욕구와 마약 시장의 덫에 빠지는 것이다. 이 두 조건은 사용자가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마약 밀매자들의 표적이 되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이해는 중독 예방과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맥락적 조건이란 중심 현상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건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맥락적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 접근으로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의 실종이 주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마초를 사용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서서히 사라졌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경험과 대마초 흡입 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다. Fergusson과 Horwood(2000:505-520)는 대마초 사용 후 큰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용자가 마약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사용자가 마약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더 강력한 마약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다른 맥락적 조건으로는 마약 사용 집단 내에서의 지위 향상이 있다. 마약 사용자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낙인은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만든다. Hall과 Lynskey(2005:45)는 마약 사용 집단 내에서 특정 마약이 더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대마초는 하류 마약으로 간주되며, 코카인이나 필로폰은 상류 마약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 또한 대마초 사용 후 상류 마약으로의 전환을 통해 집단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 하였고, 이는 결국 쾌락의 노예로 이어졌다. 마약 사용자들은 사회적 낙인을 받은 개인들로, 이러한 낙인은 사용자가 마약 집단 내에서 우월감을 가지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Hasin과 동료들(2016:1235-1242)은 사회적 낙인이 마약 사용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들이 집단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사용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더 강력한 마약 사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 마약 사용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정적인 맥락적 조건들은 개인적 경각심의 실종과 마약 사용 집단 내 지위 향상 욕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들은 쾌락의 노예라는 중심 현상을 더욱 강화하며, 사용자가 강성 마약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해는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중심 현상(Core Phenomenon)

개인들의 경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서나 사건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쾌락의 노예’로 나타났다. 이미 인과적 조건에서 나타난 쾌락의 상승 욕구와 마약 시장의 덫에 빠져드는 과정이 이 현상을 예정된 것으로 만들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마초 흡입은 초기에는 우연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서 쾌락의 노예가 되는 필연적 사건으로 이어졌다. Fergusson과 Horwood(2000:505-520)는 대마초 사용이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를 강화하며, 이는 더 강력한 마약을 찾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쾌락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마약

시장의 구조는 소비자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소비자를 창출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Hall과 Lynskey(2005:42)는 마약 밀매자들이 새로운 소비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혹하며, 특히 대마초 사용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대마초 사용 후 자연스럽게 마약 시장의 뒷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이는 쾌락의 노예가 되는 과정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쾌락의 노예’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마약이라는 주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를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마초 사용을 통해 얻은 초기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필로폰과 같은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졌다. Hasin과 동료들(2016)은 마약 사용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력한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쾌락의 노예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심 현상은 ‘쾌락의 노예’로, 이는 인과적 조건인 쾌락의 상승 욕구와 마약 시장의 뒷에 의해 예정된 결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대마초를 가볍게 시작했으나, 점차 더 강한 마약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을 마약의 노예로 만들었다. 이러한 이해는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중재적 조건은 작용과 상호작용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건들로, 본 연구에서는 ‘치료 시스템의 부재’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쾌락의 노예’라는 중심 현상이 발현된 후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적절한 치료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Hasin과 동료들(2016)은 강성 마약 사용자들이 단약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치료 환경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Fischer와 동료들(2015)은 많은 대마초 사용자들이 중독을 자각하고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과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이를 실천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마약 사용 후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나,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약을 사용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Hall과 Lynskey(2005)는 강성 마약 사용자들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참여자들은 치료 자원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였다. Carvalho와 동료들(2019)은 많은 국가에서 마약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 시스템이 부족하여 사용자가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중재적 조건인 ‘치료 시스템의 부재’는 참여자들이 ‘쾌락의 노예’라는 중심 현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적 처벌의 두려움과 정보 부족, 치료 자원의 부족은 참여자들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다. 이러한 이해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5)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Strategies)

작용/상호작용은 중심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는 개인들의 전략, 행동, 정서 등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쾌락의 노예’에 빠진 참여자들이 치료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채택한 부정적 전략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낙인에 대한 반동적 저항과 도피, 그리고 마약 사용과 밀매자의 이중 지위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직면했을 때, 반동적 저항이나 도피와 같은 부정적 전략을 채택하였다. Link와 동료들(1989:402)은 사회적 낙인이 마약 사용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며, 이로 인해 마약 사용이 더욱 촉진된다고 지적하였다. Fischer와 동료들(2015)은 낙인으로 인해 자신을 ‘버려진 몸’으로 인식하게 된 마약 사용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마약 사용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Hasin과 동료들(2016)은 낙인과 편견이 마약 사용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이를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서 마약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마초를 흡입할 때는 주로 사용자였으나,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인해 높은 비용이 발생하면서 밀매자의 역할도 겸하게 되었다. Hall과 Lynskey(2005)는 마약 밀매자들이 새로운 소비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며, 이는 사용자들이 밀매자로 전환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Hasin과 동료들(2016)은 마약 사용자가 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밀매자로 전환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마약 사용을 지속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밀매자가 된 후에는 마약 사용을 끊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는 마약 중독의 지속을 가속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쾌락의 노예’에 빠진 참여자들이 치료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채택한 부정적 전략들로, 이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다. 낙인에 대한 반동적 저항과 도피, 마약 사용과 밀매자의 이중 지위는 참여자들이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더욱 멀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해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낙인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6) 결과(Consequences)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의 직접적인 부산물로, 본 연구에서는 체념의 학습과 내재화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쾌락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으나,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시스템의 부재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방치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마초를 끊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 마약도 끊을 수 없다는 체념을 학습하게 되었다. 이는 Hasin과 동료들(2016)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대마초 사용 후 큰 부작용이 없다는 경험이 강성 마약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이를 끊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믿음을 강화했다고 보고되었다. Fischer와 동료들(2015)은 많은 대마초 사용자들이 중독을 자각하고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과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이를 실천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마초 사용자들이 자신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마약 사용과 관련된 부정적인 예단을 내재화하면서, 중독자로서의 고정된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Hall과 Lynskey(2005)는 강성 마약 사용자들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는 마약 사용자들이 치료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중독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삶은 마약으로 얼룩졌고, 이는 그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켰다. Peacock과 동료들(2018)은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용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체념의 학습과 내재화’로, 이는 작용 상호작용의 직접적인 부산물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쾌락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졌으나, 치료 시스템의 부재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방치되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마약으로 얼룩졌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체념을 학습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재화된 체념은 그들이 중독자로서의 고정된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해는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필로폰이나 코카인과 같은 강성 마약으로 파괴적 발전을 하는 과정을 탐색한 사례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자들은

대마초 흡입으로 인한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쾌락과 욕망, 그리고 파괴로 향하는 멈추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13명의 소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지만, 본 연구는 대마초 합법화가 마약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다른 마약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전보경, 2014:221-235; Paul et al., 2020:351-367)을 현실적 차원에서 기각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마초 사용자들이 강성 마약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마초 및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접근 방식의 전환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 방식은 과거의 엄벌 위주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신선희(2022:712-726)는 이러한 정책 전환이 마약류 사용자들을 범죄자로 보기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개인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부는 마약류 사범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전환하였다. 2023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실형(48%)이 가장 많으며, 집행유예(43%)와 벌금형(4.3%)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대마 사범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48.6%로, 마약류 29.2%와 항정신성 의약품 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23:189). 이처럼 대마초 사용자들의 처벌은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약물 치료 수강 명령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강제한다. 법무부에서는 대마초 사용자들에게는 심리적 지원과 사회적 낙인 극복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강성 마약 사범에게는 집중적인 중독 치료와 재범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023년 정부의 정책적 전환은 마약류 사용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대마초 사범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성마약류 사범과 분리 수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마약류 범죄를 줄이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대마초 사용자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 시스템 부재 문제에 대한 논의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자들은 사용 초기부터 후회를 느끼고 치료 방법을 모색했으나, 적절한 치료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대마초 사용자들은 강력한 마약으로 빠져들어 더 심각한 중독 문제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는 미국의 약물 법원과 달리 치료를 위해 자수하는 경우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이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자수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치료를 위해 자수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숙경, 2020; Hasin et al., 2016). 이는 마약 문제를 처벌과 치료라는 두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전국의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서는 약물치료 이수 명령과 수강 명령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주 법무병원에서는 약물중독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마약류 관리법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대통령령 제27129호)에 따라 마약류 사범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약물치료 프로그램은 종종 개인이 사용한 마약류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대마 사범과 강성 마약사범을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마 사범이 강성 마약으로 빠져들게 할 위험이 있으며, 마약류 사범의 특성과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재범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Hasin과 동료들(2016:1235-1242)은 대마초 사용자들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대마초 사범의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대마초와 강성 마약의 중독 메커니즘과 사회적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특화된 치료 프로그램이 재활에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약물치료 수강 명령과 이수 명령 프로그램 이수 후, 대마초 사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수립에 대한 논의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자들이 다시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강성 마약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강 명령 이수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이러한 출소 후 지속적인 후속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Hasin과 동료들(2016)은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대마초 사용자들이 수강 명령을 이수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추적 관리를 받지 않으면 다시 마약류 사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마초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어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대마 사용자 사례관리 서비스 시스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eacock과 동료들(2018)은 중독자들이 마약에 대한 갈망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재발 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Fischer와 동료들(2015)은 중독자들이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대마초와 강성 마약에 대한 갈망을 느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술은 인지

행동 치료(CBT)와 동기 강화 이론은 물론 다양한 이론을 활용한 심리치료 방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갈망 관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대마초 사용자들이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중독자들이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Carvalho와 동료들(2019)은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 상담,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원들은 대마초 사용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마초 사용자들을 위한 ‘대마 사용자 사례관리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은 마약류 사용의 확산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대마초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어 추적 관리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유숙경, 2024). 또한, 갈망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기술 제공, 낙인을 극복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 그리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대마초 사용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대마초 사용자들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마초 사용자들에 대한 심리 서비스 강화에 대한 논의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체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학습하고 내재화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는 마약류 중독의 심화와 지속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마초 사용으로 손상된 심리 정서의 회복과 자아 효능감 강화를 위한 문제 중심이 아닌 강점 관점의 긍정심리 차원의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 단순한 마약 중독 예방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중독재활 심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Hasin과 동료들(2016)은 마약 사용자들이 자신의 중독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치료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고 체념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Fischer와 동료들(2015)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은 마약 중독자들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심리 치료적 접근이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마초 사용자들에게도 개인과 집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심리적 회복과 단약 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치료 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중독으로

손상된 심리 정서적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수강 명령에는 마약 중독의 유해성 교육과 갈망 극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만으로는 체념과 내재화된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강 명령과 개인 상담 서비스를 보완하여 대마초 사용자들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초범의 대마초 사용자들의 재화를 위해 법무부는 보호 관찰소 교육과 교정시설에 구금 이전에 집단 교육보다는 지역사회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집단 개인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집단 교육의 경우 단순 대마초 사용자와 강성 마약 사용자를 구분하여 집단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중독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Carvalho와 동료들(2019)은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연계를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계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여, 재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Peacock과 동료들(2018)은 경제적 지원이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바우처 심리지원 서비스에 우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도를 통해 사용자들이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독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강성 마약의 진입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기까지의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였으나,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피해 사항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현상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강성 마약을 필로폰과 코카인으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100배 강하고 값이 저렴한 펜타닐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으며,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실험실 마약들이 유입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필로폰과 코카인뿐만 아니라 펜타닐 등 새로운 신종 마약 사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Peacock et al., 2018). 본 연구의 의의는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마약류 사범의 재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데 있다. 이를 통해 대마초 사용자가 강성 마약으로 진입을 차단하고,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마약류와 그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마약 중독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문철/최재천/문희철, (2023), '대마초의 중독성 연구', 약물남용연구, 45(1), pp.77-90, 충남대학교 연구소.
- 김철/구본재/류기형, (2010), '한국의 대마초 사용 패턴', 약물학연구, 22(2), pp.211-223, 한국산업식품공학회.
- 박종석/김성진/복권정, (2021), '의료용 대마 산업의 현황과 비전',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pp.37-37, 한국원예학회.
- 박진실, (2017), '대마초 합법화 논쟁: 미국과 네덜란드 사례의 비교분석', 경찰법연구, 15(2), pp.245-274, 한국경찰법학회.
- 법무부, (2023), '마약류 백서', 서울 대검찰청.
- 신선희, (2022), '마약 중독에 대한 비판적 담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9), pp.712-726, 한국콘텐츠학회.
- _____, (2020),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남성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사용 경험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숙경, (2024), '교정시설 치료공동체에 대한 질적메타 종합연구-국외 연구 중심', 矯正研究, 34(1), pp.3-42, 한국교정학회.
- 이영미, (2016), '한국 대마초 사용 실태와 그 영향', 한국중독학회지, 31(2), pp.133-150, 한국중독학회.
- 전보경, (2014), '대마초 사용과 정책적 대응', 사회정책연구, 33(2), pp.221-235,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정도희, (2021), '대마초 사용과 정신건강경', (2014), 대마초 합법화와 마약 범죄 감소,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조석연, (2017), '대마초 사용의 사회적 영향', 사회문제연구, 28(3), pp.101-115.
- 허경미, (2017), '캐나다의 대마초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행정학회보, 26(2), pp.241-268, 한국공인행정학회보.
- _____, (2018),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과정 및 주요 쟁점 연구', 한국경찰연구, 17(2), pp.291-316, 한국경찰연구.
- 허순철, (2016), '미국에서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시사점', 법학논총, 33(4), pp.31-59, 법학연구소.

■ 외국문헌

- Ahmed, A., Khan, S., & Fayyaz, M. (2015). 'The effects of cannabis on mental health: A comprehensive study.',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57, pp.123-13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Bae, H., Song, J., Choi, S., & Kim, Y. (2015). 'Effects of cannabis use on mental health and its implications in addiction therapy.', Journal of Addiction Medicine, 9(3), pp.123-132.
- Carvalho, A. F., Sharma, M. S., Brunoni, A. R., Vieta, E., & Fava, G. A. (2019). 'The safety, tolerability and risks associated with the use of newer generation antidepressant drugs: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88(5), pp.256-265.
- Choom, H., Roh, S., & Robinson, K. (2008). 'Substance abuse treatment and recovery.', Addiction Research & Theory, 16(5), pp.543-555.
- Crandall, R. (2002).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cannabis laws.', Journal of Drug Policy Analysis, 15(2), pp.183-195.
- Creswell, J. W., & Poth, C. N. (201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 SAGE Publications.
- Csémy, L., & Nešépor, K. (2022). 'Substance use in Eastern Europe.', Addictive Behaviors, 135, pp.107-113.
- Degenhardt, L., Chiu, W. T., Sampson, N., Kessler, R. C., Anthony, J. C., Angermeyer, M., ... & Wells, J. E. (2018). 'Toward a global view of alcohol, tobacco, cannabis, and cocaine use: Findings from the 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s.', PLoS Medicine, 5(7), pp.e141.
- Destrée, L., de Sola, L., Bobes, J., & Bulbena, A. (2018). 'The social impact of cannabis use: A longitudinal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208, 76-84.

Deza, M. (2015). The economic impact of cannabis leg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 pp.159-180.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EMCDDA). (2021).

Fergusson, D. M., & Horwood, L. J. (2000). 'Does cannabis use encourage other forms of illicit drug use?', Addiction, 95(4), pp.505-520.

Fischer, B., Russell, C., Sabioni, P., & van den Brink, W. (2015). 'Lower-risk cannabis use guidelines: A comprehensive update of evidence and recommendatio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7(8), pp.e1-e12.

Hall, W., & Lynskey, M. (2005). Is cannabis a gateway drug? 'Testing hypothes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annabis use and the use of other illicit drugs.', Drug and Alcohol Review, 24(1), pp.39-48.

Han, S., Lee, J., & Kim, Y. (2016). 'Cannabis use and its impact on mental health in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iatry, 57(4), pp.245-256.

Hasin, D. S., Saha, T. D., Kerridge, B. T., Goldstein, R. B., Chou, S. P., Zhang, H., ... & Grant, B. F. (2016). 'Prevalence of marijuana use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between 2001-2002 and 2012-2013.', JAMA Psychiatry, 72(12), pp.1235-1242.

Imtial, H., Azeem, M., & Nasir, A. (2023). 'Cannabis use and mental health outcomes.', Mental Health & Prevention, 29, pp.200-212.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Link, B. G., Cullen, F. T., Struening, E., Shrout, P. E., & Dohrenwend, B. P. (1989). 'A modified labeling theory approach to mental disorders: An empirical 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pp.400-423.

Melberg, H. O., Jones, A., & Roe, S. (2010). 'The economics of addiction: Cannabi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9(3), pp.297-305.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Muutinenm, P. (2018). 'The role of cannabinoids in pain management: A comprehensive review.', Pain Research and Management, 2018, pp.1-12.

Musio, C., MuSsig, K., & Amaducci, L. (2018). 'Psychological impacts of drug addiction and the road to recovery.', Addiction Research & Theory, 26(6), pp.487-495.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2021). Is marijuana addictiv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https://nida.nih.gov/publications/research-reports/marijuana/marijuana-addictive>.

O'Grady, M. A., Tennen, H., & Armeli, S. (2022). 'The association between cannabis use and mental health outcom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36(1), pp.123-134.

Paul, J., et al. (2020). 'Cannabis legalization and its impact on drug crime rates.', Journal of Drug Issues, 50(3), pp.351-367.

Peacock, A., Leung, J., Lamey, S., Colledge, S., Hickman, M., Rehm, J., ... & Degenhardt, L. (2018). 'Global statistics on alcohol, tobacco and illicit drug use: 2017 status report.', Addiction, 113(10), pp.1905-1926.

Randall, M. (2007). 'The influence of cannabis on mental health and addiction.', Journal of Drug Issues, 37(3), pp.583-609.

Ryz, N. R., Remillard, D. J., & Russo, E. B. (2017). 'Cannabis roots: A traditional therapy with future potential for treating inflammation and pain.', Cannabis and Cannabinoid Research, 2(1), pp.210-216.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Sweeney, J., & McGoe, L. (1990). 'The effects of cannabis on cognitive functioning.', Psychopharmacology, 101(2), pp.332-338.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20). 'World Drug Report 2020. Available at:', UNODC World

Drug Report 2020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22). World Drug Report 2022. United Nations. <https://www.unodc.org/unodc/en/data-and-analysis/wdr2022.html>

Whitfield, C. L. (1985). 'Stress management and its relationship to cannabis use.',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23(11), pp.21-24.

Wilson, J., Williams, A., & Norris, C. (2021). 'Global trends in cannabis leg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97, pp.103-11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The health and social effects of nonmedical cannabis use.', Geneva: WHO Press.

Yin, R. K.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Yin, R. K. (2021).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기타자료

<https://www.natureandbloom.com/countries-where-weed-is-legal/>(검색일 : 2024. 07. 20.)

<https://cannigma.com/regulation/cannabis-regulation-around-the-world/>(검색일 : 2024. 07. 20.)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전달식



- 추진 목적**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을 통한 수용생활 안정 및 가족관계 유지 지원
- 일시·장소** 4. 16.(수) 11:00, 본부장실
- 참 석 자**
- 교정본부 : 본부장, 사회복귀과장 등 4명
 - 기부자 :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회장 유정수 등 3명
- 기 부 액** 1,000만 원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참석



- 일시·장소** 4. 25.(금) 10:00,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
- 참 석 자** 본부장, 대전지방교정청장, 대전교도소장 등 12명
- 주요 내용** 영상 상영, 기념사, 기념공연 등

2025년 3월 우수 수사관 및 정보관 증서 수여식



- 일시·장소** 4. 21.(월) 11:20, 교정본부장실
- 주요 내용** 안양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교사 강민창
대전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교감 양정식

국가보훈부장관, 대전교도소 현장 방문



- 일시·장소** 4. 25.(금) 15:30, 대전(교)
- 방 문 자**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국장 등 5명
 - 교정본부 : 본부장, 대전지방교정청장 등 4명
- 주요 내용** 기관현황 설명, 순직교도관 추모비 참배, 시설 참관 등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4월 22일 서울청 소속기관 취창업지원 담당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수직원 표창과 수범사례 공유가 이뤄졌으며, 교정과 공단의 협력방안 및 노하우가 논의되기도 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신규 위촉 교정위원 참관행사 실시

서울구치소는 지난 4월 14일 2025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교정협의회회의 장항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0명이 참석했다.



안양교도소 | 교사 현민준

봄맞이 청렴 다짐 식목행사 진행

안양교도소는 지난 4월 4일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봄맞이 청렴 다짐 식목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청사 주변에 꽃을 식재한 뒤, 주변을 대청소하며 쾌적한 교정 환경을 조성했다. 이로써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함을 물론, 청렴 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경기대 학생 대상 참관행사 진행

수원구치소는 지난 4월 4일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교정시설 운영, 수용자 처우 등 교정실무를 직접 체험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유희지

부활절 연합예배 및 기부금품 전달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4월 15일 수용자 125명과 외부인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활절 연합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예배를 통해서는 빵 3,000개, 계란 3,000알 등의 기부금품이 전 수용자들에게 전달됐으며, 이로써 수용자들의 원활한 교정교화와 심리안정에 이바지했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변호사회 대상 참관행사 열어

인천구치소는 지난 4월 21일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수용거실과 신입실을 돌아보며 수용자 인권과 교정행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 강화도 모색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이성환

교정위원 10명 신규 위촉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4월 16일 교정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에는 송운 스님·KBS 아나운서 미술가·탈렌트 김혜영·가수 박치은 등 '교화위원(4명)', 사랑빛교회 오성민 목사 등 '종교위원(5명)', 음악밴드 브로콜리너머의 김잔디 '교육위원(1명)'이 포함됐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오근섭

화흥병원과 '외부진료' 업무협약 맺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4월 9일 '화흥병원'과 수용자 진료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용자들에게 외부의료시설 진료 및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명예의 전당 헌액식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4월 11일 오랜 기간 수용자 상담과 교화, 종교·취업 지원 등에 헌신해 온 교정위원들을 기리는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서는 30년 이상 봉사한 이들을 포함해 총 44명의 교정위원이 헌액됐다.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제80회 식목일 행사 실시

여주교도소는 지난 4월 4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 비료주기, 유실수 전기작업, 잡목 제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녹화 52주년을 기념하고 산물 예방과 건강한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정한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대학원생 참관 진행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4월 21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학원생 및 학부생 12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직업훈련소, 독거수용동 등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교도소 | 교도 남윤성

검찰청 시찰 및 참관 실시

춘천교도소는 지난 4월 17일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찰 및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수용자 인권보호 상황 점검과 교정행정 이해를 위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수용거실과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확인했다.

원주교도소 | 교도 이동환

인권의식 함양 위한 직무교육 실시

원주교도소는 지난 4월 16일 외부강사를 초빙, '교정행정 공직자의 민권의무와 역할'이라는 주제의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인권의 정의와 유형, 공무원의 인권 의무 등 행동강령 전반을 다뤘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식목일 행사 및 환경정비 실시

강릉교도소는 지난 4월 4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식목 행사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주기능 소장과 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산물소 소실된 녹지를 복원하는 한편,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한

2025년 진로박람회 참여

영월교도소는 지난 4월 23일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일대에서 열린 진로박람회에 참여해 진로상담, 교정장비 및 제복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희도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교정직 공무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영랑호 환경지킴이" 봉사활동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 4월 3일 "영랑호 환경지킴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랑호의 '자연생태 보존'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진행된 이번 활동에는 강원북부교도소 직원 및 교정위원 30명이 참여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평택·안성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난 4월 17일 평택·안성 교정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안성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서는 2024년 활동 평가와 함께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이루어졌다.

소망교도소 | 주임교도관 박성호

5번째 '담장 안 미술 전시회' 개최

소망교도소는 지난 4월 14일 제5회 '담장 안 미술 작품 전시회'를 열고,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날 오픈식에 참석한 백다솜 작가는 "이번 전시가 수용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선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직원 화합 체육대회 개최

대구교도소는 지난 4월 23일부터 2주간 소속 직원 화합 체육대회(종목: 줄다리기)를 진행했다. 예선전을 포함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부산혈액원과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부산구치소는 지난 4월 1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지속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문헌배

산불 피해 주민 위한 모금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4월 14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실시했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모금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을 전하고자 실시됐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참관 실시

창원교도소는 지난 4월 8일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2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 교화프로그램 소개, 수용동 및 직업훈련 작업장 참관 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교정교화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식목일 맞아 식수·청림문화 행사 진행

부산교도소는 지난 4월 4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및 청림문화 확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교정공무원들은 묘목 20주를 식재하며 산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민원실 해오름갤러리 작품 전시

포항교도소는 지난 4월 2일 민원실 내 '해오름갤러리'에서 김혜경 작가의 초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마음을 그림으로 말하는 시간'을 주제로 6월 30일까지 진행, 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산불 예방 위한 합동훈련 실시

진주교도소는 지난 4월 16일 진주시 대곡면 일대에서 진주소방서와 함께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신속한 협력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구치소 | 교사 박재원

2025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실시

대구구치소는 지난 4월 15일 2025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마취임식을 개최했다. 교정위원과 교정참여인사, 소장 및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교화 활동 실적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한 회의안건이 논의됐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참관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4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관 현황 및 참관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직업훈련공과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음주운전 근절 행사 및 교육 실시

안동교도소는 지난 4월 18일 음주운전 근절 행사 및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음주운전 근절' 피켓과 어깨띠를 활용한 캠페인, 자율적 음주축정,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황인옥

신규 임용 전입자 환영 행사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 4월 7일 교정직 9급 신규 직원 임용 행사를 개최했다. 신규 직원들의 신고를 받은 임용점소장은 이날 "경북2교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먼저 법과 원칙을 숙지하고, 열의를 가지고 선배들에게 배우며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현

냉난방기 청소 봉사활동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4월 16일 김천시 아포읍에 위치한 한 마음아동복지지역센터를 방문, 냉난방기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전문적인 청소 경력을 보유한 의무교도대원들로 구성된 자체 냉난방기 청소팀의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손민성

신규공무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4월 7일 신규 임용 공무원 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용식, 소장 훈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선호 소장은 "교도관으로서의 첫걸음을 응원한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해달라"고 말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개최

울산구치소는 지난 4월 16일 신규 교정위원 17명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홍대 소장은 "교정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허준녕

청림문화 확산 위한 식목행사 실시

경주교도소는 지난 4월 2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청림문화 확산을 위한 식목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산불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외곽 철조망 주변 건조를 제거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며 '청림나무'를 식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사랑의 짜장면데이 행사 진행

통영구치소는 지난 4월 15일 '사랑의 짜장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교정협의회와 정일훈 요리사(정가네 찜뽕 대표)를 포함한 2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정서적 위안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부북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밀양구치소는 지난 4월 7일 자매결연을 맺은 부북초등학교 재학생 5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직원들의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특별히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1명에게 별도의 장학금 100만 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산불대비 소방훈련 진행

상주교도소는 지난 4월 17일 교정시설 주변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훈련을 진행했다. 방화선 구축, 수용자 대피, 옥외소화전 사용, 비밀문서 반출 등을 실시한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은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수용자 대피 방안을 모색했다.

거창구치소 | 교도 방준철

수용자 체포·제압술 훈련 실시

거창구치소는 지난 4월 10일 수용자 체포·제압술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체력 증진과 대응 방법 단련을 목표로, 수용자 계호 시 직원 폭행 피해를 방지하고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진행됐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비상대기숙소 자치회의 및 환경정리 실시

충주구치소는 지난 4월 15일 비상대기숙소 거주 직원 자치회의 및 환경정리를 실시했다. 자치회의에서는 비상대기숙소 운영에 대한 입주자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으며, 이후 환경정리 활동을 통해서 주변을 청소하며 질서 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제80회 식목일 기념해 사과나무 식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지난 4월 3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자체 식목일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은 사과나무와 화초를 식재하고, 주변 화단을 정리하며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현도

전 직원 인권강화 교육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 4월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정행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된 상황에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교정행정의 적법성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청주교도소 | 교위 송화섭

청렴 캠페인 및 환경미화 활동 진행

청주교도소는 지난 4월 4일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홍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청렴 캠페인과 환경미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25명의 직원과 대체복무대원은 교도소 진입로와 외부정문 일대에서 담배꽂초와 오염물질을 수거하며 환경을 정비했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참관

천안교도소는 지난 4월 9일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수용시설과 가족만남의 집을 둘러보며 수용자들의 생활과 시설 운영 실태를 살펴봤다. 이로써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체감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진행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4월 22일과 23일, 외부 강사를 초빙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고위직 대상(22일)과 전 직원 대상(23일)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교육은 문제 상황 발생 시 상급자의 역할과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참관

공주교도소는 지난 4월 10일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교도관의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수용동과 울타리 시스템, 작업장 등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재진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동참

홍성교도소는 지난 4월 3일 충남서부보훈지청이 주최한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에 참여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애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함께, 독립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구자호

천안·아산지역 유관기관장 참관

천안개방교도소는 4월 9일 천안·아산 지역 유관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성상욱 천안지청장을 비롯한 10명의 기관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시설의 현황을 듣고, 접견실과 수용자 진료실 등을 둘러보며 다양한 교정현장을 체험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전용배

수용자 난동진압훈련 모의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 4월 15일 거실 내 수용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는 상황을 가정, 난동진압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신속 전파, 출동 직원들의 체계적 역할 분담 및 진압 대형, 채증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취·창업 지원업무 위한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지난 4월 15일 정부광주지방법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각 지부 담당자 및 소속기관 취업·창업 담당자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취·창업 지원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현

산불 대비 자체 소방훈련 실시

광주교도소는 지난 4월 8일 산불에 대비한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85명의 자위소방대는 시설 내에 비치된 옥외소화전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사했으며, 수용자 긴급대피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또한 신속하게 진행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전주완산소방서 대상 참관 진행

전주교도소는 지난 4월 17일 전주 완산소방서의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관은 최근 화재 발생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교정시설 내 화재 사고 대비를 꼼꼼히 하고자 실시됐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제80회 식목일 기념식수 행사 개최

순천교도소는 지난 4월 4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 등 환경정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조병주 소장 이하 각 부서 직원들은 철쭉 50주, 조경수 3그루를 정문 앞 과 복지와 입구의 화단에 심었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준휘

권역별 직업훈련과장 간담회 개최

목포교도소는 지난 4월 4일 2025년도 권역별 직업훈련과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선 소속기관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군산교도소 | 교도 이주민

전북도 기능경기대회서 두각

군산교도소는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 '2025년 제55회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군산교도소는 귀금속공예·보석가공·실내장식 등 3개 직종에서 두각을 나타내, 수형자 11명이 금상(27개)·은상(37개)·동상(37개)·장려상(37개)을 수상했다.

제주교도소 | 교도 유상준

직원이 함께하는 체육행사 실시

제주교도소는 지난 4월 14일 한림공원에서 직원과 함께하는 체육행사를 실시했다. 허덕한 소장을 비롯, 3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자유로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 소장은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외부강사 초빙 양성평등교육 실시

장흥교도소는 지난 4월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 초빙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이미은 전문강사는 이날 "이번 교육이 공무원사회의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하 소장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해남교도소 | 교사 안창수

2025년 상반기 합동소방훈련 실시

해남교도소는 지난 4월 8일 해남소방서와 함께 2025년 상반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는 최근 화재 발생 시 수용자 이송 등 수용관리 대응 방안을 공유했으며, 산물 확산 방지 및 화재진압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김대현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참관

정읍교도소는 지난 4월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소속 직원 및 봉사위원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 대해 참여자들은 "법무보호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모범 공무원



수원구치소 | 교도 이석현

이석현 교도는 복지와에서 기계설비 업무를 담당하며 평소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정전 대응 모의훈련과 폭우·폭설 대비 점검 등을 주도하며 비상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과납을 발견, 환불 협의를 통해 약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평소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교정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울산구치소 | 교위 정현정

정현정 교위는 지난 3월 7일 신입 수용자 입소 절차 중 금지물품을 적발해 교정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정 교위는 이날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입소한 수용자의 소지품을 검사하던 중 가방 속 화우치에서 미량의 가루가 든 투명 비닐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평소에도 여성수용동의 기초질서 확립을 비롯한 수용자 동정관리, 환자관리, 폭행사건 예방교육 등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청주교도소 | 교위 김용석

김용석 교위는 지난 4월 12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제30회 대전지방교정청장기테니스 대회를 주관하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이끌었다. 청주교도소를 포함한 6개 기관, 4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청주시 남일면의 협조로 성무생활체육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듯 김 교위는 솔선수범하며 기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스포츠 행사를 통해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에 힘썼다.



해남교도소 | 교위 박순천

박순천 교위는 평소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집중 인성교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형 확정 후 자칫 예민해질 수 있는 수용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규범의식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자질이 결여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복귀에 기여했다.

‘월간 교정’과 함께하는
교정본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교정본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주세요!



교정본부 인스타그램



이벤트 참여



월간 <교정>이 교정 관련 논문을 모집합니다.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종류

학위논문(석사, 박사),
학회 논문, 학술지 논문

제출
방법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원고 송부

※ 제출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MY K FESTA
마이
케이
페스타

KSPD DOME
핸드볼경기장



산업전시
콘서트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25.06.19 THU — 22 SUN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FICE
Korea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myK FESTA